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2022
경 상 남 도 감 사 사 례 집



경 상 남 도
(감 사 위 원 회)



안 내 문



이 사례집은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원 등 외부감사 및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자체감사의 주요 반복사례를 정리하여 9개 분야로 편집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인사 · 행정 · 복무 분야

1. 인사기록 관리 소홀 등 인사관리 업무 부당처리	10
2.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12
3.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13
4. 대체인력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14
5.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업무 등 부적정	15
6. 대학 강사 특별 채용 추진 부적정	16
7.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징계의결요구 업무 부적정	17
8. 징계의결등 요구 업무 부적정	18
9. 의원면직 신청에 따른 퇴직 제한사유 확인 부적정	19
10.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미실시	20
11. 공가사용 및 출장 중 건강검진 등 복무규정 위반	21
12. 근무지 무단이탈 등 상습 복무 위반	22
13. 범죄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통보에 따른 공무원 품위손상	23
14. 선거홍보물 파손에 따른 공무원 품위 손상	24
15.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사후처리 부적정	25
※ 「참고」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26

2 예산 · 회계 · 계약 · 인허가 분야

1.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비) 집행 부적정	33
2. 속칭 ‘카드깡’을 이용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34
3.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35
4.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36
5. 업무추진비 및 당직비 집행 부적정	37
6. 회계관직 재정보험 가입 부적정	38
7. ○○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처리 부적정	39
8. 하자검사 미이행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40
9. 단일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41
10. 건축신고(개발행위 등 의제) 업무처리 소홀	42
11.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43
1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44
13.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등 부적정	45

3 수입(지방세 등) · 재산 · 기록물 분야

1.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정 누락	48
2. 재산세 감면 추정 및 부과 누락	49
3.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징수 등 부적정	50
4. 공유재산 수익매각 처리 부적정	51
5. 공유재산 매각 위법·부당 처리	52
6.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53
7.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적정	54
8. 행정재산 보험료 미징수 및 관리 위탁갱신 처리 부적정	55
9.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감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56
10. 산업단지 입주자 재산세 감면 추정 누락	57
11. 정수물품 승인 절차 없이 취득 부적정	58
12. 불용결정 및 불용품 폐기 업무처리 부적정	59
13. 재물조사 업무처리 소홀	60
14.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미실시	61
15. 기록물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62
16. 생산문서 등록 부적정	63
17. 생산의무대상 회의록 미작성	64
18. 기록물 무단 폐기	65

4 민간위탁 · 보조금 분야

1. ○○○○○○센터 「지방계약법」 미준수 관련 지도·감독 부적정 ...	68
2. ○○○○○○유통센터 위탁 운영 관리·감독 부적정	69
3. ○○○○○○공원 관리위탁 계약업무 부당처리	70
4.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관리 및 위탁업무 부적정	71
5.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부적정	72
6. 공영주차장 손해보험 가입 등 위탁업무 관리 부적정	73
7.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및 관리감독 부적정	74
8. ○○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75
9. ○○○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 소홀	76

5 사회복지 · 보건 · 환경분야

1. 양육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80
2.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81
3.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부적정	82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미이행	83
5. 축산물 위생업소 등 위생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84
6.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폐·휴업신고 수리 부적정	85
7.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 통보 부적정	86
8.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등 사업장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 부적정 ...	87
9. 정수시설 종사자 수인성 감염병 건강진단 부적정	88
10.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관리 미흡	89
※ 「참고」 정부합동감사 환경분야 주요 위반사례	90

6 경제 · 산업 · 농업 분야

1.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등 법정민원 처리 지연	115
2.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고발 미이행	116
3.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부적정	117
4. 농지전용 제한면적 초과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118
5. 처분 의무 부과된 농지의 전용허가 부적정	119
6.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명령 미통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120
7.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 처리 부적정	121
8. 담배소매인 지정 등 업무처리 소홀	122
9. 불법전용산지 등에 대한 조치 소홀	124

7 토목 · 건축 · 안전 · 교통 분야

1. 도로점용(굴착) 허가에 따른 준공확인 미흡	127
2.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28
3.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미이행	129
4. ○○연구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130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업무 부적정	131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비탈면 안정성 등 검토 소홀	132

7. ○○ ○○○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134
8.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137
9.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허가제 등 추진 부적정	138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39
11. 자동차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140
12.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141
13. 하수도중점관리 침수대응사업 공법선정 업무 등 추진 소홀	142
14.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43

8 문화 · 관광 · 체육 분야

1. 관광농원사업 사후 관리업무 부적정	145
2.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46
3.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자 경력조사 미흡	147
4. 야영장 미등록업체 불법 영업 관리 소홀	148

9 공공기관 분야

1. 직원 채용계획 사전심의 누락 등 채용 업무 부적정	151
2. 연구직 채용절차 부적정	152
3.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 부당 체결	153
4. 국내여비 부정 수령	155
5. 전산 장비 구입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156
6. 입주기업 연장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57
7. 지체상금 미부과 등 용역계약 기간 연장 부적정	158
8. 성과연봉 산정·지급 부적정	159
9. 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부적정	160
10. 이사회 의사록 기록 부적정	161
11. 유연 근무자 복무 관리 부적정	162

인사 · 행정 · 복무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 위 업 무	감사 착안 사항
승진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요구 및 수사·조사 진행자에 대한 승진 여부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적정 여부 ■ 승진소요 최소 연수 준수 여부 ■ 특별승진 대상, 요건, 절차 적정 여부 ■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 적정 여부
근무성적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단위별 순위 조작 여부 ■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적정 여부 ■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적정 여부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업무대행자 지정의 적정성 여부
복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이용 특혜, 건설공사 분야 비위·유착, 인·허가 비리 등 ■ 직무관련 금품 수수, 직무권한 이용 부당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출장비·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 음주소란, 폭행, 성희롱 등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이권개입, 부정청탁, 관내 업체 불법행위 묵인 ■ 인사비리, 공무원 갑질 등 건강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 등

1 인사기록 관리 소홀 등 인사관리 업무 부당 처리

판 단 기 준

1. 인사기록 관리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입력)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변경된 경우에는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함(인사기록 관리 부적정).
-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성 비위 관련 징계처분의 경우 6개월을 가산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됨(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2. 퇴직 제한 사유 확인 소홀 및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한 후 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르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고, 다만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승진임용할 수 없음.

지 적 사 항

1. 인사기록 관리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 ○○군에서는 지방○○주사보 ○○○의 경우 '20. ○. ○○. 성범죄 혐의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월이 지난 '21. ○월(일자 미상)이 되어서야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였고,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복직되자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급여 ○,○○○천 원을 소급 지급함.
- ○○군에서는 ○○○ 등 3명에 대해 성 비위 징계처분임에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지 않고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고 그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로 상정되었음.

2. 퇴직 제한 사유 확인 소홀 및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 ▣ ○○군에서는 '20. ○. ○○. 명예퇴직 처리한 ○○○ 등 6명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서만 접수하고 퇴직 제한 사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을 허용하였음.
- ▣ ○○군에서는 '19. ○○. ○○. ○○○가 '10. ○. ○○.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함.

유의사항

-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 관리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퇴직 제한 사유 확인 등 철저

판 단 기 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5항에 따른 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제3항에 따라 각 평정 단위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없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19년 상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심의(안)을 작성하면서 평정단위별 제출된 서열명부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은 채 ○○○○국에서 제출한 지방○○주사보 서열명부에는 ○○○(1위), ○○○(2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최종 서열명부에는 ○○○(2위), ○○○(5위) 순으로 변경한 후 '19.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는 등 '19년과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총 20명에 대해 평정단위별 서열을 부적정하게 변경하였음.

유 의 사 항

- ☞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대조·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점수 산정 및 합격순위 결정 부적정

- 「〇〇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기시험·실기 시험이나 면접전형 및 서류전형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〇〇군에서 '〇〇〇〇업무 〇〇〇〇 채용 면접 계획'에서는 채용방법을 서류 50%, 면접 50%으로 정하고 있으며, '20. 〇〇. 〇. '21년도 〇〇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미실시

- 「〇〇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사용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총원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공고절차를 거치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지 적 사 항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점수 산정 및 합격순위 결정 부적정

- 〇〇군에서는 '20. 〇〇. 〇〇. 수립한 〇〇〇〇업무 〇〇〇〇 채용 면접 계획'에서 정한 채용방법에 따라 서류점수와 '면접위원 3명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각각 50%씩 반영하지 않고, 서류 25%, 면접 75%를 반영하여 합격순위를 결정함에 따라 면접점수를 75% 반영한 총점수 순으로 1순위인 〇〇〇과 2순위인 〇〇〇이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1. 〇. 〇〇. 3순위인 〇〇〇을 채용하였음.
- 당초 공고한 대로 합격순위를 결정한 결과, 3순위로 채용된 〇〇〇은 5순위가 되어 채용될 수 없었고, 〇〇〇이 4순위에서 2순위로 되는 등 서류 및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

2.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미실시

- 〇〇〇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〇〇명을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유 의 사 항

☞ 채용규정 등에 따라 서류·면접 점수 산정 철저 및 채용 공고 이행 철저

판 단 기 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와 병가 또는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한편 경상남도 인사과에서는 '20. ○. ○○. '2020년 대체인력뱅크 및 업무대행제도 안내' (인사과-○○○○호) 공문을 통해 출산휴가·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우수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하였음.

지 적 사 항

- ○○○○○에서는 '16. ○. ○○.부터 ○○○○생산시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방○○주사보(일반임기제) ○○○의 계약기간이 '21. ○. ○○.자로 만료되자,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공백은 대체인력 채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새로운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될 때까지 업무공백을 방지한다는 사유로 ○○○를 별도의 공고나 서류전형·면접 등의 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하여 '21. ○. ○○.부터 같은 해 ○. ○○.까지 근무하게 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사유(휴직, 병가 또는 출산휴가 등)에 해당 여부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 ○○시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2호(자격증), 제3호(경력), 제9호(학위)호 중 하나의 응시 자격요건을 정해 공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응시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에 실적 가감점을 더하여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18. ○. ○. 방침을 받아 같은 해 ○. ○. 공고한 "○○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에는 ○○업무 지원 분야에 시간선택제 다급(7급 상당) 1명을 채용하면서 응시 자격요건에 「지방공무원」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와 제3호(근무경력)를 모두 요구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총 ○○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을 하면서 11명에 대한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그 결과 「지방공무원」 제2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중 하나만 선택하였을 경우 응시가능한 자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였음.
- 또한 '19. ○. ○. '18년도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하면서 ○○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 ○○○이 '18. ○. ○. '훈계' 처분을 받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 ○○점에서 0.2점을 감하여야 함에도 실적 감점 없이 그대로 ○○점으로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2호(자격증), 제3호(경력), 제9호(학위)호 중 자격요건 중복 여부 확인 및 근무실적평가 시 실적 가감점 반영 철저

6 대학 강사 특별 채용 추진 부적정

판 단 기 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에서는 ○○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 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는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 강사 인사 관리규정」 제4조 및 「○○○○○○○대학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는 산업체를 원 소속 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대학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강사 특별 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과는 강사 특별 임용 추천서에 소속 전임 교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추천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대학 ○○○○과에서는 '○○○○○실습 I' 과목의 강사가 특별 임용요건 (산업체를 원 소속 기관으로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을 충족 하지 못했음에도 특별 임용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는 등 강사 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유 의 사 항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등에 따라 강사 특별 임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채용 절차 이행 준수

판 단 기 준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에 따르면, 감사원·수사기관 및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서 징계등(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공소제기 결정일 경우 개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관에서는 '18. ○. ○○. ○○○○과 지방○○주사 ○○○에 대해 ○○지검 ○○지청으로부터 협박, 공갈미수 등 무려 ○개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수사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 ○년 ○개월이 지난 '21. ○. ○○. 법원의 2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고 나서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20. ○. ○. ○○○○과 ○○○○담당 ○○○에 대해 ○○지검 ○○지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수사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0개월이 지난 '20. 11. 30.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고 나서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음.

유 의 사 항

- ☞ 감사원·수사기관 및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8 징계의결등 요구 업무 부적정

판 단 기 준

1. 여비 부담수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미부과 및 징계감경 부적정

- ○○시 ○○○○관에서는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공금 횡령·유용 또는 사기 등인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따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외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금 횡령·유용 또는 사기 등과 같이 표창 공적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감경대상 공적란에 표창 공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2. 수사결과 통보 처리기준 위반

-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의 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에서는 지방○○주사 ○○○이 “출장목적과 다르게 사적행위 및 출장비 부담 수령” 혐의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표창 공적 감경대상이 아님에도 ○○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증빙자료 중 하나인 확인서의 내용 중 [2. 비위 유형란]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에 “해당 없음”으로, [3. 징계 부가금 대상 여부]에도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였고, [4. 감경대상 공적 유무란]에는 ○○○이 재직기간 중 수상한 총 3건의 표창 공적사항 모두를 기재한 결과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사건이 아닌 단순한 성실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혐의자 ○○○을 ‘감봉 1월’에서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음.
- ○○시 ○○○○관에서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 통보를 받은 ○○시 지방○○사무관 ○○○ 등 5명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례를 답습하여 ‘훈계’ 처리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표창감경 대상 여부 등 확인
- ☞ 수사기관 통보사항의 경우 내부종결(혐의없음) 처리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판 단 기 준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와 조사 및 수사기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함)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지 적 사 항

- ○○시에서는 '21. ○. ○○. 의원면직 신청한 ○○○에 대해 퇴직 제한사유 조회결과 같은 해 ○. ○. ○○경찰서로부터 「'21. ○. ○○.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있음」이란 내용의 회신공문을 접수하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 ○.자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이후 ○○지검 ○○지청으로부터 ○○○이 '정직' 이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50%)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결과 "불구속 구공판" 되었음을 통보받았음.

유 의 사 항

- ☞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 확인 철저

10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미실시

판 단 기 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겸직허가 등 복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육아휴직 중인 소속직원 ○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어학원에서 ○개월 동안 수차례 강의를 하고 ○, ○○○천 원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명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소속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거나 외부강의를 하면서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11 공가사용 및 출장 중 건강검진 등 복무규정 위반

판 단 기 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제7조의6(공가) 등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고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병역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 공가대상 사유에 해당될 때 공가를 사용토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면 지방○○주사보 ○○○ 등 ○○은 승인받은 날짜에 건강검진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가를 사용한 후 연가보상비 2,89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지방○○주사보 ○○○ 등 ○명은 공무상의 사유로 출장을 득하고 출장시간 중 건강검진을 수행하였고 출장여비 50천 원도 부당수령함.

유 의 사 항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제7조의6(공가) 등에 따라 복무 철저

12 근무지 무단이탈 등 상습 복무 위반

판 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및 제4조의2(출장공무원)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출장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됨.

지 적 사 항

-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에 자택 귀가, 세탁소 방문, 지인에게 맡겨둔 자신의 골프가방 되돌려 받는 등의 사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4회, 출장목적 외 사적용무 3회 등 총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13 범죄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통보에 따른 공무원 품위 손상

판 단 기 준

-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등에 따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됨.

지 적 사 항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행위자는 정지선이 신호등 바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마침, 우측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마 ○○○○호 화물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과 행위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운전자에게 약 ○주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 이 건으로 인해 행위자는 '22. ○. ○○.(○)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 ○○.(○)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
- 이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당위적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유 의 사 항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14 선거홍보물 파손에 따른 공무원 품위 손상

판 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지 적 사 항

- ○○○○○○○ ○○○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 하던 중 '○○○○○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설치해 놓은 선거홍보물(후보자 등신대)을 손으로 쳐서 사진의 어깨 부분을 파손하였음.
- 이는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행동 가짐을 조심히 해야 할 당위적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홍보물을 파손하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임.

유 의 사 항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준수 철저

15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사후처리 부적정

판단 기준

- 「○○○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담당 과장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판결금의 지급, 패소의 원인이 법령·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에서는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적 사항

- '18. ○. ○○. ○○○외 1명(이하 '원고'라 한다)은 ○○○ ○○○ ○○○ 마을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소유의 ○○○ ○○○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포장 및 매설 상하수관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로포장 및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됨.
- 이에 ○○○ ○○○○○○에서는 '19. ○. ○○.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관 매설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관을 제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으로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음.
- 그런데 ○○○ 관련부서에서는 판결결과를 통보받고도 해당마을 이장이 "마을길 사용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해 보겠다"는 제안만 믿고, 원고와의 협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결과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유의 사항

- ☞ 「○○○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 확인 및 이행 철저

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 업적홍보 · 선거기획 참여 행위제한 위반

1	선거기획 참여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비위 내용	◇◇구 A는 ◆◆◆ 前의원이 정당경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활동 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자회견문과 출마선언에 있던 공약내용을 보내면서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해당 양식으로 편집해 주었고, 선거공보물 등 각종 자료의 초안을 검수·교정하여 제공	

2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중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네이버 밴드에 ◆◆◆시장의 SNS링크, 공약대상 수상실적 소개, 출마의 변 유튜브 링크 등을 공유	

3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자료 왜곡 작성·배포	중징계
비위 내용	◇◇군 A는 ♡♡일보에서 보도된 기획보도 중 전국 단체장 역량 평가 항목 중 행정서비스, 재정역량, 주민만족도 중에서 ◇◇군이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부문은 순위권 밖이고 주민만족도 부문에서만 1위로 평가 받았음에도 ◆◆◆군수가 자치단체장 역량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 허위사실 공표죄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발 및 언론 보도	

4	현직 시장의 업적홍보 자료 카페 게시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일반주민 인터넷 카페, ◇◇시 홍보자문단 단체카톡방에 ◎◎당 ◇◇시장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시장의 치적 홍보내용을 다수 게재 및 홍보	

5	출마예정자 현직 시장의 치적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 내용	◇◇시 A 등 6명은 시정전략회의가 끝난 후 시장으로부터 테크노밸리 유치홍보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관련 내용을 게재한 소식지 8만 매를 제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	

6	군수의 업적에 포함된 홍보물 배부	경징계
비위 내용	◇◇군 A는 '◆◆◆대학 및 ◆◆아카데미 입학식'을 선거일 전에 개최 하면서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 총 13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직 군수가 직접 60분간 "2018 군정 이렇게 운영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발표한 미래발전 전략, 주요 역점시책 등 설명자료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통해 행사장 스크린에 송출하였고, 행사 중에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7	시의원 경조사 알림 및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시의원이 모친의 팔순잔치 초청장을 동 유관단체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소속 직원에게 팔순연 초청장을 배포하도록 지시 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시의원 행사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시의원에게 유관단체의 모임 일시와 장소, 참석자 수, 인구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표를 소속직원에게 매주 모바일로 전송케 하여 사람들의 모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8	시장 출마예정자 문자발송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의원으로부터 "◇◇시장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아 같은 날 본인의 공직메일을 사용하여 쪽지의 내용을 ♡♡일보 등 191명에게 송부하여 선거법 위반	

□ 선거관여 및 중립의무 위반

1	선거관련 오찬 주선 및 식사비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중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를 초대하여 전·현직 공무원 6명과의 오찬을 주선하고 식사비용(134천원) 지불하였으며, 선거구민 53명에게 경선 일정·결과 등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2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문자메시지 발송	경징계
비위 내용	◇◇군 A는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 (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	

3	술자리 모임에서 건배 제의 등 특정 후보자 지지표명	훈계
비위 내용	◇◇시 A는 공무원 2명 등 총 11명과 함께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술자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 제의를 하는 등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	

4	후보자를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하여 사적 만남	훈계
비위 내용	◇◇군 A 등 5명은 평소 사적모임 멤버인 ◇◇군수 재선거 후보자를 모임 장소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	

5	마스크 배부시 군수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훈계
비위 내용	◇◇군 A는 마스크 4만 매를 주민에게 배부하면서 군수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	

□ 선거관련 기부행위 등 제한 위반

1	시정홍보 기념품의 선거이용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시장으로부터 동창회에 사용할 기념품인 수건과 농특산물을 각각 60개씩 준비할 것을 지시받은 후 이를 동창회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외빈 방문용 기념품(젓·잡곡세트 등) 60개를 동창회 총무에게 전달	

2	선거업무 담당자가 이장단 워크숍 추진 및 비용지원	경징계
비위 내용	◇◇군 A는 ◎◎리 이장을 포함한 7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워크숍 계획을 수립·실시하면서 제주도 녹차박물관 방문, 카멜레아 힐 관람, 용머리 해안가 관람 등 관광성 여행의 워크숍 비용 20,000천원을 집행	

3	구청장 명의로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훈계
비위 내용	◇◇구 A는 '21.1.25.(월) 코로나19 방역활동 봉사자(2,400명) 및 관내 소상공인(6,400명) 등에게 코로나 극복 감사 서한문과 방역물품(마스크 3매씩)을 구청장 명의로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4	군수 명의로 선물을 제공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훈계
비위 내용	◇◇군 A는 '21.2.9.(화) 17:10분경 ◇◇군수가 한의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도중 군수 관용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김 선물세트(쇼핑백 5개, 총 96천원)를 한의원 직원 5명에게 '군수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제공	

□ 선거관련 SNS 게시물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1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	경징계
비위 내용	◇◇구 A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B후보 지지 게시물 239회, C후보 반대 게시물 194회, D후보 지지 게시물 25회, E후보 반대 게시물 99회, 기타 ○○당 지지 게시물 14회 등 총 574회 선거관련 게시글을 공유	

2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지지의사 표명	경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시장 재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 30회 클릭, '좋은 결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등 댓글 6회 작성	

3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지지의사 표명	경징계
비위 내용	◇◇시 A는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 48회 클릭, "당당한 국민시대 열어주세요", "당당한 보수 대연합을 실천할 시기입니다" 등 댓글 5회 작성 아울러 무소속 의원 C, ◆◆당 의원 D의 게시물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 58회 클릭, "당당한 보수시대 화팅" 댓글 1회 작성	

4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지지의사 표명	훈계
비위 내용	◇◇시 A는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10회 클릭	

5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지지의사 표명	훈계
비위 내용	◇◇군 A는 ◇◇군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 16회 클릭, 이모티콘(러브 등)으로 댓글 6회 작성	

예산 · 회계 · 계약 · 인허가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위업무	감사 착안 사항
회계관리	<p>■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의 예산집행기준 등 준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가 다양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 기관운영·부서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상 적정 여부 - 성격이 상이한 예산 혼용 및 분리발주 대상 일괄 발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시설비(401-01), 공공운영비(201-02)을 혼용하여 공사 예산으로 사용, 전기,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임에도 일괄발주 등 - 물품 구매·제조 시 물품품의요구서 작성 등 계약절차 이행 및 검사(검수) 후 지출 절차 이행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보관 및 인수인계 적정 관리 여부 <p>■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 인건비(수당, 여비 등) 적정 집행 여부</p> <p>■ 인사이동 시 회계관직 지정 및 권한 관리 철저, 재정보험 가입 이행 여부 등</p> <p>■ 세입세출외현금 e호조 관리 및 보관금 관리 적정 여부</p>
계약관리	<p>■ 입찰 공고 및 계약업체 선정 적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참가 허용 여부 - 적격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 기술의 평가 적정 여부 - 수의계약 금액기준 충족 여부 - 재공고 입찰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p>■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업체와 계약 체결 여부 - 이해관계자와의 계약 체결 여부 - 변경계약(기간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체결 적정 여부 - 하도급 적정 여부 - 계약보증금 처리 적정 여부(계약 미이행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여부 등) <p>■ 검사 및 대가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 - 검사조사 및 준공검사 적정 여부(결과물이 과업지시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판 단 기 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을 지양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각 부서 등에서는 시설부대비로 총 ○건, 2,642천 원을 공사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공사기간 종료 이후, 공사 준공일 등에 피복비를 지급하였고,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 절차 없이 관내 업체를 통하여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였음.

유 의 사 항

- ☞ 피복비 구입·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 지양

2 속칭 '카드깡'을 이용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판 단 기 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속 직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지 적 사 항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군 ○○○○과에서는 '22. ○. ○○.(○) 16:30경 ○○○에서 ○○○○과 공무원 8명과 ○○○근로자 30여 명 등 약 ○○여 명이 참석하여 음식과 주류를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담당 내 직원들은 회식에 소요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돼지고기 64만 원 등 약 10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 또는 개인비용으로 각각 구입하였음.
- 그리고 같은 담당 내 지방○○주사보 ○○○은 회식 이후 속칭 '카드깡'을 통해 예산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외상값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

2. 부당지시

- '22. ○. ○○.(○) 실시한 ○○○근로자 회식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2. ○월 초부터 담당 내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차례 회식을 준비 하도록 요구하고, 회식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사무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속 직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규정 준수 철저

3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판 단 기 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대리자를 지정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및 제118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에서는 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회계담당자가 지출원의 구두승인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아이디를 공유하여 지급명령을 이행하거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 권한 없는 직원의 대리 결재를 받아 총 176건, 658,679천 원을 집행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철저

4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판 단 기 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에 한해서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직원격려를 위한 격려금품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담당관에서는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편성해야할 퇴직공무원 기념품, 직원 생일 축하상품권, 출산축하금 등을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17년 214백만 원, '18년 225백만 원, '19년 231백만 원, '20년 159백만 원, '21년 14백만 원 총 843백만 원의 포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과목 편성 적정 여부 확인 철저

5 업무추진비 및 당직비 집행 부적정

판 단 기 준

-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20. 12. 21. 당직비와 같은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20년 예산으로 '21년 1월 당직비 13,75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과 내에 비치된 금고에 보관 후 회계연도가 경과된 '21년에 지출하였음.
- 또한 ○○○○과에서는 '2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995천원 중 57%인 11,354천원을 12월에 집중하여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재정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6 회계관직 재정보험 가입 부적정

판 단 기 준

-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험 가입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방기금법」 제6조 제2항에는 기금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해서도 「회계직원책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 「○○ 회계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면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20년 ○○월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출납원 및 기금 담당자에 대해서 재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회계 관계 업무를 수행토록 함.

유 의 사 항

- ☞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갱신 조치 철저

판 단 기 준

1. 과업수행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는 수의계약 대상 여부와 배제사유 해당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함.

2. 설계변경 미이행, 수행하지 않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지급

-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과업수행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 ○○군에서는 ○○○○중앙회 ○○○○○○본부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수행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과업수행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설계변경 미이행, 수행하지 않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지급

- ○○군에서는 본 용역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결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완공검사 시에도 계약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수행하지 않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16,167천 원을 지급하였음.

유 의 사 항

- ☞ 수의계약 체결 시 용역 과업수행 자격여부 확인 및 완공검사 시 계약이행 여부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1. 하자검사 미이행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해야 함.

2.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징구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하자검사 미이행

- ▣ ○○○에서는 '17. ○월부터 '21. ○월까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유효한 공사 24건에 대해서 정기검사 60건, 최종검사는 12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19년과 '20년에는 하자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 ▣ 또한 지난 道 종합감사에서 하자검사 미이행으로 지적되어 재발 방지 '주의' 촉구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감사 시까지 동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2.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 ▣ ○○○에서는 '18. ○○. ○○. 계약금액이 33,543천 원인 경남○○노동조합 3개소 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 보증 지급각서만 제출받고 공사 준공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아 하자보수 보증 징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유의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철저

9 단일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판 단 기 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분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 적 사 항

- ▣ ○○시에서는 가로등 가공선 지중화 공사가 ○○시 관내의 단일 공사로 사업시기나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으로 법령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시기에 1인 건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에 맞추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계약부서에서는 ○○○과에서 분할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더라도 동일 시기의 단일공사로서 통합발주 계약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총 11건 공사를 8개 업체와 각각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 입찰계약하지 않아 타 업체의 참가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계약 대상 여부 확인 철저

10 건축신고(개발행위 등 의제) 업무처리 소홀

판 단 기 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등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기한 연장 없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면 건축 목적을 위해 의제 처리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실효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건축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 착공연기 등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

지 적 사 항

- ○○시는 '19. ○○. ○○. 수리한 건축신고가 미착공 되어 '20. ○. ○. 건축주에게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됨을 안내한 후 같은 해 ○○. ○○.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같은 해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을 일괄처리하였음.
- 이로 인해 건축주는 건축신고가 실효되면 이후 재차 건축신고 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추가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2,809천 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
- 또한 건축신고가 실효되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업무처리가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데도 '21. ○. ○○. 착공연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세움터에서 직권으로 효력 상실을 취소시켜 같은 해 ○. ○○. 건축주에게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하였음.
- 더욱이 착공연기 기한인 '21. ○○. ○○.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아 다시 교부한 건축신고의 효력이 또다시 상실되었는데도 같은 해 ○○. ○○.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건축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22. ○. ○. 건축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개발행위변경허가 등을 일괄 처리하였음.
- 이로 인해 건축주는 건축신고가 실효되면 이후 재차 건축신고 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추가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2,587천 원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농지전용면적 축소로 2,293천 원을 환급 받았음.
- 한편 ○○과에서는 '22. ○. ○. 착공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해 2. 16. 건축주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유 의 사 항

-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착수기한 연장 없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실효 사항 확인·처리 철저

11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판 단 기 준

- 자연녹지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10,000㎡를 초과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7조 등에 따라 사업의 성격, 동일인 토지소유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여야함.
- 그리고 법인·개인 등이 타인에게 공급(판매·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면적 5,000㎡(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인허가 명의 변경이나 타인에게 일체의 공급행위(판매 또는 임대)가 제한됨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고, 인허가와 동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등으로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를 위반한다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17. ○. ○. 등 ○○○ 외 3명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신청한 서로 연접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10,000㎡)를 초과하였는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 처리함.
- 또한, ○○시 ○○과에서는 '18. ○. ○○. ○○○가 소매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청한 ○○시 ○○면 ○○리 677-1 외 3필지(6,482㎡)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를 하면서 토지면적이 5,000㎡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임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 처리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도지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있음.

유 의 사 항

- ☞ 연접한 여러 필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개발행위 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 등록대상임에도 확인 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1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판 단 기 준

-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신청이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함.
- 이와 관련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 적 사 항

- ○○○에서는 '20. ○. ○○. ○○○가 신청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건축물의 소재지(○○면 ○○리 659-1번지 외 1필지)가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상 행위제한 저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하였음.

유 의 사 항

- ☞ 부동산 개설 등록 업무 시 「공인중개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 여부 확인 철저

13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등 부적정

판 단 기 준

1.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부적정

- 「옥외광고물법」 제4조 등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자사광고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2.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후속조치 부적정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광고물의 관리자등에게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등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지 적 사 항

1.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부적정

- ○○시에서는 녹지지역은 광고물 설치 허가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자사광고만 설치할 수 있음에도 2건의 타사광고를 허가하였음.

2.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후속조치 부적정

- 표시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옥외광고물이 54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과에서는 이들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하여 연장허가 대상임을 통보만 하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등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541건이 모두 불법광고물로 방치되고 있음.

유 의 사 항

- ☞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철저

수입(지방세등) · 재산 · 기록물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위업무	감사 착안 사항
취득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부대비용 과세표준 누락 여부 ■ 골프회원권 취득시 보증금 외 부담금 과세표준 누락 여부 ■ 신축 건물 공사비 일부 과세표준 누락 여부 ■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적정 과세표준 적용 여부 ■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부과 여부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 여부 ■ 공장 신·증설 및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정 여부 ■ 대도시 내 법인 등록세 중과의 적정 여부 ■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
취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 취득세를 감면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였는지 여부 ■ 취득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을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세 등 기타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에 따른 재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는지 여부 ■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지방세 체납금 등 직접 수납한 세입금 처리의 적정 여부 ■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다르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재산세 분리과세 적정여부
체납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 납기기한 경과 후 독촉장 발부 여부 ■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일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재산의 압류 요건이 성립된 경우 압류 조치 여부 ■ 압류해제 사유의 적정 여부

1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

판 단 기 준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10조(과세표준) 및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등에 따르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사실상 취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등에는 누락한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18건 11,593천 원, 무허가건축물 3건 3,807천 원, 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건 18,301천 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음.
- 그리고 ○○시 ○○과에서는 ○○(대표자 ○○○)이 창업 당시 사업목적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일부임대)로 사용하였음에도 감면 받은 취득세 6,257천 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취득세 총 2건 8,486천 원을 추징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취득세 부과대상 및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 취소 사유 확인 철저

2 재산세 감면 추정 및 부과 누락

판 단 기 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나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고,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및 제111조(세율)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은 분리과세(1천분의 0.7) 세율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 잡종지 등 토지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세율(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을 적용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주)가 '17. ○. ○○. 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직접사용 목적 보유토지로 하여 '18년부터 '19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인 '19. ○○. ○○. 매각하였는데도 11,948천 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재산세 총 3건 24,786천 원을 추징하지 않음.
- 그리고 ○○시 ○○과에서는 지목이 전·답이나 농지 일시전용 사용허가를 받아 사실상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9필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부과하여 재산세 총 9건 4,678천 원을 과소 부과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세 감면 후 감면 추정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 농지 일시전용 사용 허가 자료 등을 확인하여 재산세가 과소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공유재산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등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시 ○○과(총괄재산관리관)에서는 '18년부터 '21년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된 재산을 1차 파악하여 각 재산관리관에 무단점유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여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회계과에서 통보한 공유재산 실태 1차 조사 결과 무단점유된 514건 중 점유자 미상을 제외하고 사실관계(점유자, 점유면적 등)가 파악된 212건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외 후속조치도 일부만 조치*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 원상회복명령 안내문 발송(106건), 경작금지 팻말 부착(17건)
- 또한 ○○시 ○○○○과에서는 공유재산 ○○시 ○○동 ○○번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가 '19년과 '20년에 회계과 공유재산 실태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 재산으로 통보되었고, 용도폐지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자료 등에 첨부된 항공 사진으로 무단점유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탐문 조사와 변상금(추정액 2,697천 원) 징수조치를 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원상복구만을 안내한 후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적정하게 함.

유 의 사 항

- ☞ 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은 일반 입찰하여야 하나 재산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공유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 매각하는 경우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나열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지 적 사 항

- ○○시에서는 ○○면 ○○리 ○○○-○○번지(367m²)가 재산가격이 31,268천 원이고, 대부자가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18. ○○. ○○. 수의 매각처리 하였음.
- 또한 ○○읍 ○○리 ○○○○-○(900m²)번지 중 일부(450m²)를 5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것으로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19. ○. ○○.에 매각하였으나, 당초 매각 결정과 달리 변경 보고 없이 대부하지 않은 공유재산 189m²를 포함하여 매각하였음.

유 의 사 항

- ☞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재산가격, 수의계약대상자 등 수의계약 대상 여부 확인 후 매각

판 단 기 준

1. 수의 매각 목적 행정재산 용도폐지 부당 처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 용도폐지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군수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2.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처리 부적정

- ☐ 공유재산 매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의 재산가격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6조 및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대장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매각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수의 매각 목적 행정재산 용도폐지 부당 처리

- ☐ ○○군 ○○○○과에서는 ○○○○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보상 처리하면서 토지 소유자 중 1인에게 행정재산을 대체 부지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하였고,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처리를 완료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을 목적으로 용도폐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대체부지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내 소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군수의 결정 절차 이행 없이 과장 전결로 부당하게 용도폐지 하였음.

2.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처리 부적정

- ☐ ○○군 ○○○○과에서는 재산가격이 58백만 원(㎡당 882천 원)인 공유재산 토지가 분할되어 공시된 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공부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인근 지번의 공시지가(㎡당 396천 원)를 임의로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26,136천 원으로 산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고, 또한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도 교환 가결된 사항을 매각 심의를 거친 것으로 '군유재산 처분계획'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매각 처리하였음.

유의 사항

- ☞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용도폐지 대상 여부 확인 및 관련 절차를 준수
- ☞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대상 여부,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6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또는 공유 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면서 위·수탁 협약서 및 사용·수익 허가서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등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도 '17년부터 '21년까지 사용·수익 허가한 ○○○수련관 등 행정 재산 24건 대해 ○○시가 납부한 보험료 20,013천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보험료나 공제금 부과 대상 여부 확인

판단 기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19. 7. 1.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업종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를 시달('19. 7. 16.)하면서 감면 대상 지역과 업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시 등에 사업장이 있고, 조선업·조선기자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통보하였음.

지적 사항

- ○○○○○○에서는 '19. ○. ○. '19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면서 ○○○이 ○○등의 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조선업에 해당하지 않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9년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 총 3건 203,556천 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하였고, '20년 정기분 징수 시에 감면 착오를 인지하고도 '19년 착오에 대한 감면 취소 및 징수는 하지 않음.

유의 사항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1. 사용·수익허가 재산 보험료 미징수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 공유재산에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 또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보험료 등)은 사용자 부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공유재산별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수익 허가서에 보험료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명시하였음.

2.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 갱신 시 공유재산심의회 미이행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음.
- ▣ 또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에서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등 필요한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사용·수익허가 재산 보험료 미징수

- ▣ ○○시에서는 '17년부터 '21년까지 사용·수익 허가한 ○○○ 체험관 등 행정재산 8건에 대해 ○○시가 납부한 보험료 2,020천 원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음.

2.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 갱신 시 공유재산심의회 미이행

- ▣ ○○에서는 ○○○체육공원 등 5건의 행정재산을 두 번 이상 갱신하여 관리 위탁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갱신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심의회 결정 없이 위탁기간을 갱신처리함.

유 의 사 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행정재산 보험료 징수 및 관리 위탁기간 갱신 시 공유재산심의회 이행 철저

판 단 기 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주정차 기재되어 있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야 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만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 등에서는 '19.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의견진술 41건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면제처리 하였고,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63건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면서 43건은 협조공문, 출장 명령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면제하였으며, 그 중 21건은 위생점검 및 교육 등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 업무추진 중에 발생한 주·정차 위반 건도 포함되어 있는 등 과태료 면제처리를 부적정하게 함.
- 또한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을 할 수 없는 19건에 대해 납부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징수(624천 원)하였음.

유 의 사 항

-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철저

10 산업단지 입주자 재산세 감면 추징 누락

판 단 기 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해야 함.

지 적 사 항

- ○○시에서는 ○○면 ○○리 ○○○○-○번지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15년부터 '17년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18년 정기분 부과 시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미사용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정상 부과하였음에도, 감면 받은 재산세 57,485천 원을 추징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에 대한 재산세 추징 철저

11 정수물품 승인 절차 없이 취득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춰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하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으로 하며,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 물품관리 조례」제9조 및 제24조에 의거 주관 과장이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리관은 위와 같은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20. ○.부터 '20. ○.까지 구내교환 장비 등 ○종 ○개의 정수물품을 정수배정없이 취득함.

유 의 사 항

- ☞ 물품 수급관리계획 및 물품매입요구 심사 없이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

12 불용결정 및 불용품 폐기 업무처리절차 소홀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고 소속 기관의 장(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용이 결정된 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를 할 때는 불용품매각조서 또는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고 폐기처분은 지정된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과에서는 총 ○건의 불용결정 건에 대하여 불용결정통보서 작성 없이 불용결정 ○건, 불용품폐기조서 작성 없이 폐품 외부 반출 ○건, 폐기처분시 입회자 미지정 ○건 등 불용품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불용품을 폐기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

13 재물조사 업무처리 소홀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지침」에 따르면 정기재물조사 준비단계로 물품관리관은 해당연도 취득 및 처분관련 장표를 당해 연도 '20. 6. 30. 기준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할 경우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 중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 등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여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후 조치사항으로 대장에만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손망실 처리 등 재물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지 적 사 항

- ○○에서는 전자태그가 미부착된 물품 ○○점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였음에도 부착하지 않고 사물함에 보관하면서 물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현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재물조정 또한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재물조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유 의 사 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무조사 업무 철저

14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미실시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는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되 매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매가격(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에서 '○○. ○. ○○.에 매각한 불용품의 장부상 가격을 살펴보면, ○○는 ○○○,○○○○ 천 원이고, ○○ 분석기는 ○○○,○○○천 원에 이르는 바, 매각 당시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체인 (주)○○○등 2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불용품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공고 하는 등 장부가격 기준 ○○억 여 원의 불용품에 대하여 정당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각함.

유 의 사 항

- ☞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철저

15 기록물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판 단 기 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편철 및 관리)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분류기준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및 제29조(보존 방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등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명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및 증명자료 기록물에 해당하여 5년간 원본을 보존해야하는 '2019학년도 12월 ○○○○ 지출증빙서' 중 101건의 서류를 분실하였고, 수감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문서고에 보관된 지출증빙서를 찾는 과정에서 지출증빙서가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인식함.

유 의 사 항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물 보존기간 준수 및 관리 등 이행 철저

16 생산문서 등록 소홀

판 단 기 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음.
- 또한 「○○공사 사무관리규정」제19조, 제22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공사는 '○○. ○. ○.부터 ~ '○○. ○. ○○.까지 공사(용역) 감독임명 문서 '○○. ○○건, '○○. ○○건, '○○. ○○건 등 총 ○○건을 부서팀장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등록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문서를 생산하였을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생산등록번호 부여 등록 철저.

17 생산의무대상 회의록 미작성

판 단 기 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한 생산의무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게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에서는 '○○. ○. ○○. ○○심의위원회를, ○○과에서는 '○○. ○.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작성·생산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위원회 개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작성을 철저히 함

18 기록물 무단 폐기

판 단 기 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고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관의 장이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에서는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19년부터 '20년까지 생산·보유 중이던 X-ray 필름을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폐기하고, 폐기업체에 ○○○Kg의 필름의 수량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각함.

유 의 사 항

- ☞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기록관으로 이관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

민간위탁 · 보조금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 위 업 무	감사 착안 사항
민간위탁센터 운영	<p>■ 수탁기관 선정 및 규정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협약서 내용 등 준수 여부 -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재계약 적정성 등 <p>■ 재무회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 공사·용역·물품 구입시 「지방계약법」 등 준수 여부 - 공사하자보증 및 하자검사 이행 여부 - 위탁사무회계에 부합하게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적정성 <p>■ 임대 및 문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중 일부 제3자 전대(임대)시 계약방법 적정 여부 -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p>■ 교부 및 집행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계획서 적정 여부,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예산전용 - 인건비 등 위탁금 및 수입금 회계처리, 수탁기관 지도·감독 적정성 <p>■ 정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검사,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보조금 운영	<p>■ 선정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자부담 등 부담능력 여부 등) - 보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p>■ 집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교부목적, 교부조건 등 준수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회계관리 적정 여부(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 여부 - 소득세 등 원천징수 및 지방계약법령 준수 여부 - 보조사업 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p>■ 정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업무 등 적정성(실적보고시 필요한 적정 서류 구비 여부 등) -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은 경우 정산 여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여부 등

판 단 기 준

- 경상남도 ○○○○○○센터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0조 및 12조에 따르면 '조합'은 위탁운영에 따른 보조금 운영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에 따르면 사업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에서는 수탁기관인 '조합'에서 위탁금 집행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일반입찰에 의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道 ○○○○○○에서는 '조합'에서 2019년과 2020년 '○센터 ○○○○시스템 교체 및 ○○○ 증설 납품 계약' 등 5건의 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에 의하여야 함에도 동일업체에 5건, 370,223천 원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에도 위탁금 정산 및 위탁기관 점검 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음.
- '19년 '조합'에서 '○센터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주공정이 실내인테리어로서 당해 사업의 주된 공정에 상응하는 업종인 '실내건축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전문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및 전문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확인 등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등 위탁기관 지도·감독 철저

판 단 기 준

- 「○○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전대금지)에 따르면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시와 (주)○○○○○○○유통센터가 '19. 11. 22. 체결한 「○○시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 협약서」 제13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주)○○○○○○○유통센터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매각, 임대, 교환, 재위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주)○○○○○○○유통센터가 ○○시와 별도 협의 없이 휴대폰 판매업체인 '○○○○○○'과 '19. 12. 24. 매장사용 약정을 체결하여 매월 4,000천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시설물의 일부(9.9㎡)를 사용하게 하였고, '○○○○○○'과는 2020. 12. 29. 매장사용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금 10,000천 원에 매월 4,000천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1. 1. 1.부터 '22. 12. 31.까지 시설물의 일부(9.9㎡)를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제3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유통센터 위탁 운영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유 의 사 항

- ☞ 위탁 운영 시 재위탁, 임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판 단 기 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계약의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19. ○. ○. ○○○군과 관리수탁자 (주)○○○○(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체결한 ○○○○○공원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6조(보험가입 등)에 따르면 수탁자는 본 협약체결의 계약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협약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군에서는 '19. ○. ○○. ○○○○○공원 관리위탁 연장결정을 한 후 같은 해 5. 31. 기간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5. 27. 수탁자에게 협약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로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수탁자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위·수탁 관련서류 등을 전혀 제출받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 결과 ○○군에서는 수탁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않아 수탁자가 '20년 ○○○○○ 공원 ○○장(위탁) 사용료 등 50,330천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에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 31,250천 원을 받지 못해 ○○군의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 확인 및 징수 철저

판 단 기 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고,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 ○○시에서는 ○○사 주차장 및 ○○○광장 주차장을 '01년과 '13년 준공하였는에도 건축물을 최초 등기·등록하지 않았음.
- ▣ 또한 ○○사 주차장 및 ○○○광장 주차장의 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준공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법인 ○○”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유 의 사 항

- ☞ 공유재산 등기·등록 등 누락 여부 점검
- ☞ 행정재산 관리 위탁 시 수의계약, 일반입찰 등 요건 확인

5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부적정

판 단 기 준

- ▣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등에 따라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그 차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원가분석을 통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 결정절차에 따라야 함.

지 적 사 항

- ▣ ○○시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탁자의 실제 수입과 지출증빙을 받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원가계산 방식으로 위탁료를 산출하지 않고 전년도 위탁료에 지역 침체영향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탁료를 감액하여 산정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유 의 사 항

- ☞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시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후 예정가격 결정

판 단 기 준

-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시와 ○○시의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손해배상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라 시에서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시가 부담한 보험료는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과 등 4개부서는 ○○과에서 '19년부터 '21년까지 손해보험료 18,737천 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수탁자에게 시의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광장, ○○사 주차장은 공제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고 있음.
- ○○시 ○○과에서는 '19년 52개, '20년 48개, '21년 4개 주차장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과, ○○○○과에서는 '19년부터 '22년까지 4개 주차장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과에서 3개 공영주차장 손해보험료 8,861천 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수탁자에게 시의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공유재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할 보험료 등 확인

판 단 기 준

- ○○시에서 ○○○○○○상인회와 '19. 10. 25. 계약체결한 「○○○○○○○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협약서」의 위탁기간은 '19. 11. 1.부터 '21. 12. 31.까지이며, 협약서 제14조(위탁의 연장·해지)에 따라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위탁의 연장여부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공유재산의 관리 위탁) 등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르도록 함.

지 적 사 항

- ○○시 ○○○○○○에서는 관리위탁기간이 '21. 12. 31.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지도·감독하지 않고, 정당한 계약체결 절차 없이 기존 수탁자가 관리위탁하도록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 또한 감사자료로 제출한 '22년도 「○○○○○○○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협약서」는 수익금 납부방식과 관리위탁기간을 소급하여 '22. 1. 1.부터로 변경하면서 시장의 방침 결재로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수탁자에게 계약체결 통보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유 의 사 항

- ☞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시 위·수탁 기간 확인, 관련 절차에 따라 위·수탁 추진

판 단 기 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실적보고), 제28조(정산검사)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 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가 '20년부터 '21년까지 '○급 상당'인 사무처장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지급하여 2년간 총 3,600천 원을 과다 지급 하고, 같은 기간 배우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 등 4명에 대해 총 12,240천 원의 가족수당을 중복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함.
- 또한 ○○에서 '20년부터 '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시도 체육회 직원의 경조금품 지급 등의 명목으로 9건, 540천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함.

유 의 사 항

- ☞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심사 철저

판 단 기 준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바·도비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비 변경의 10%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4항에 따르면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2. ○○○○ 시설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추가공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공사로 발주하여야 함.

3. 급경사지 비탈면 안정성 검토 미이행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등에 따르면 비탈면 높이가 20m 이상 및 불안정 요인을 갖는 지형·지질 조건의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거동, 안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계측을 실시하고 파괴형태와 원인에 대한 유발원인을 고려한 비탈면에 대한 안정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국바·도비 보조사업 완료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미이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르면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 사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원별 비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하여 반납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도비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 ○○군에서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사업비 29,184백만 원으로 확정하여 시행하면서 '19. ○. ○. ○○○○ 공법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시행함으로써 사업비가 5,208백만 원 상당이 절감되어 전체사업비의 17.8%의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또한 예산 절감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7건 2,285백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급경사지 위험해소가 아닌 경관조성 사업으로 집행하였음.
- 그리고 '21. ○. ○○. 경관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후 '21. ○. ○○. 준공처리 함.

2. ○○○○ 시설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

- ○○군에서는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 'E등급' 지역에 대한 붕괴 위험지역의 정비목적으로 '○○○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면붕괴 위험예방을 위한 목적과 관련이 없는 ○○○○ 상부 급경사지를 이용한 ○○○○를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설치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음

3. 급경사지 비탈면 안정성 검토 미이행

- ○○군에서는 탈락된 암괴, 수직절리, 이완된 절리가 존재하는 구간으로 연간 낙석 발생 건수가 소규모 낙석을 포함하여 약 20건 내외로 발생하는 비탈면에 '21. ○. ○○. 설계변경을 통하여 인공폭포를 설치하면서 계측과 비탈면에 대한 실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불안정 요인에 대한 조사와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반영하였고 착공단계에서 실시한 비탈면에 대한 안전해석의 결과만으로 시공하였으며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

4. 국비·도비 보조사업 완료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미이행

- ○○군에서는 '○○○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을 '21. ○. ○○. 준공 후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완료보고를 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058백만 원 상당의 집행잔액을 재원별 비율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 및 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1,022백만 원 상당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별도사업으로 발주하여 집행하였음.

유 의 사 항

- ☞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집행잔액 반납 절차 이행 철저

사회복지 · 보건 · 환경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 위 업 무	감사 착안 사항
사회복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여부 - 의료급여사업 추진 적정 여부 -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부적정 - 시설장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및 타 업무 겸직 여부 - 종사자 신규채용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퇴직적립금 적정 적립 여부 - 시간외근무, 출장 등 복무관리 적정 여부 - 보조금, 후원금, 4대 보험, 소득세, 퇴직적립금 등 적정금액 보유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여부(시설예산을 법인운영비로 집행) - 법인후원금 계좌 외 별도 시설 후원금 계좌 개설 여부 -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 사용 공개 여부 - 지정 후원금 용도외 사용 여부, 비지정 후원금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보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시설 종사자 수인성 감염병 건강진단 소홀 -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관리 미흡 -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 및 관리인 교육 미 실시 - 축산물 영업장 연간 위생검사(점검) 미 실시 등
환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 통보 부적정 -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 - 불법시설물 철거 등 자연공원 관리 적정 여부 -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업무 적정 여부 등 - 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적정 여부 -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이행 여부 - 정수시설 운영·관리 적정 여부 - 수변구역내 불법시설물 관리소홀 - 폐수처리업 및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중과세 부과 적정 여부 -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사업장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 -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적정 여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판 단 기 준

1. 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및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등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2.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1. 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 ○○군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영유아 4명에게 총 8,350천 원의 양육수당을 과지급한 후 과지급된 양육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2.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 ○○군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4명에게 총 1,317천 원을 과지급 하였고 이를 환수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수급자 2명에게 기초연금 1,123천 원을 미지급 하고 있음.

유 의 사 항

☞ 「영유아보육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양육수당 및 기초연금 징수·환수 등 확인 철저

2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판 단 기 준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부적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자격상실 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취득·변경·상실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변경 처리하여야 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환급 처리 부적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행정적 착오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한 경우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해당 대상자의 정산진료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본인 부담분을 수급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부적정

- ○○시에서는 총 73명에 대하여 자격상실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469회에 이르는 진료가 의료급여비용으로 이루어져 46,953천 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의료수급자 21명에게는 종별 변경처리 지연으로 본인부담금 917천 원을 부담하게 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환급 처리 부적정

-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정산진료비 자료를 통보받고도 환급대상자 615명 28,139천 원에 대한 환급신청 안내 및 환급을 하지 않았으며, 수급권자 255명에게는 청구시효가 소멸되어 총 8,777천 원의 금전적 손실 초래.

유 의 사 항

- ☞ 「의료급여법」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및 본인부담금 환급 처리 철저

판 단 기 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신도 및 그 가족 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토질 조사서, 평균 경사도 조사서, 자연장지 조성 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21 장사(葬事)업무 안내(보건복지부)」 10-1-1에 따르면 장사시설 설치·운영 주체로서의 종교단체는 ①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 법인 ②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 ③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종교단체는 물적 요소인 성당·교회·불당 등의 종교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목사·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군에서는 '20. ○. ○○. ○○○○에서 종교단체 자연장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신청한 ○○면 ○○리 산○○번지(1,980㎡, 임)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소속 여부, ○○ 건물 존재 유무, 목사 및 신도 수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철저하게 확인 하지 않고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20. ○○. ○○.)를 하였음.
- 그 이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으로 분양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아 종교 단체 자격 요건을 재검증·확인하였고, 결국에는 종교단체 자연장지 허가를 취소 ('21. ○.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 제기, 불필요한 민원 발생 야기,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있었음.

유 의 사 항

- ☞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서류 검토, 현장확인 등을 통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실제 운영사항 점검

판단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따르면 '15. 7. 29.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 건축물 및 공중 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 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이라 함)"을 받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군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17년부터 매년 1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군 ○○○○과 등 담당기관 및 담당부서로부터 BF 인증제도 운영 안내 및 준수 협조 공문을 통보받은 바 있고, 건축 허가 당시 ○○○○○과에서 BF 인증 대상시설이라는 관계 부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BF 인증에 필요한 소요 기간(3개월 이상)과 설계비, 인증 수수료, 시설 개선비 등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유의 사항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BF인증 절차 이행 철저

판 단 기 준

1. 축산물 판매업소 등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 감독 부적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의해 축산물위생업소의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위생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2. 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소 품목 등 실적보고 관리·감독 부적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에 의하면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연도별 생산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축산물 위생법 위반업체 미공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공표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축산물 판매업소 등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 감독 부적정

- ○○○(대표자 ○○○) 등 39개의 업소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7,600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생교육 인식 부족으로 '18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중 '19년 16개 업소에서 반복하여 위생교육을 미이수 함.

2. 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소 품목 등 실적보고 관리·감독 부적정

- 사천시에서는 (주)신진축산 등 6개 업소에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1,800천원을 부과하지 않음.

3. 축산물 위생법 위반업체 미공표

- 사천시에서는 '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 공표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소 등 위생교육 및 축산물 가공업 품목 실적보고 관리 감독 및 위반업체 홈페이지 등 공표 철저

판 단 기 준

1. 의료기관 행정처분 부적정

-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의료인 등은 의료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의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2. 의료기관 폐·휴업신고 수리 부적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의하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지 적 사 항

1. 의료기관 행정처분 부적정

- ○○시 ○○○○과에서는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 ○의원, ○○○의원 등 2개소의 의료광고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만 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2. 의료기관 폐·휴업신고 수리 부적정

- ○○시 ○○○○과에서는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의료기관 폐업·휴업신고 27건 중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미제출, 진료기록부 수량·목록 등의 서류 미첨부 5건, 진료기록 수량·목록 등의 서류 미첨부 11건 등 총 16건의 휴업·폐업 신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유 의 사 항

- ☞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의료기관 폐·휴업신고 수리 철저

판 단 기 준

- ▣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경우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훼손면적 등 인·허가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 ○○시에서는 ○○리 ○○신 ○○시설 설치사업,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1. ○. ○.과 '21. ○. ○○. 각각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나 2건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 지적 이후에 이를 인지하고 통보함.
- ▣ 따라서 ○○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 2건에 대한 통보기한 미준수로 인하여 총 54,160천 원 부과 누락.

유 의 사 항

- ☞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철저

판 단 기 준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등 사업장 행정조치 부적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차 경고, 2차 사용 중지 처분을 하여야 함.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부적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사업(공사) 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신고 사항과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함.

지 적 사 항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등 사업장 행정조치 부적정

- ○○군 ○○○○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124건 중 신고 87건, 미신고 37건으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누락되었으며, 공사기간이 짧게는 33일에서 길게는 566일 연장된 비산먼지 발생 변경 미신고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경고 등 행정 처분 미이행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부적정

- ○○군 ○○○○과에서는 '18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441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27개소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41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정기점검 대상 491개소 중 40개소만 점검하고 451개소에 대하여 미점검

유 의 사 항

-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및 지도 점검 이행 철저

판 단 기 준

- 「수도법」 제32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지 적 사 항

- ○○정수사업소에서는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매년 6개월 기준으로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6개월 이상 정수시설물에 출입하는 용역·공사의 현장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6개월 이상 정수장 관련 공사·용역 등을 시행할 경우 현장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인성 감염병 건강진단 여부 등 확인 철저

10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 관리 미흡

판 단 기 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마약류도매업자 등 마약류취급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을 시기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임.
-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여야 함.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2개월), 4차(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지 적 사 항

- ○○ 관내 마약류취급자는 허가 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교육이수 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철저

정부합동감사 환경분야 주요 위반사례

I

자연환경 분야

(1)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 (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개발사업 승인 또는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

※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제44조

- (사례 1) ○○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개발사업 승인
- (사례 2)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숲체험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승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 자연녹지지역 면적 10,000㎡,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 (규정)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통보받은 후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확정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를 협의기관(○○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

※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46조

- (사례) ○○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0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허가·승인후 30일이 경과하고도 협의기관인 ○○○환경청에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미통보

(3) 자연공원(도립·군립공원) 관리 소홀

- (규정) 자연공원에서 공원사업 외 행위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 시설물은 철거 등 조치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실시
※ (관련 규정)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31조
- (사례 1) ○○시는 ○○○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불법시설물(식음료 판매장, 창고, 컨테이너)에 대한 조치명령, 고발 등 조치 없이 방치
- (사례 2) ○○시는 군립공원 내 공원지정 전 기존 건축물이 허용 기준(지상층 연면적 200㎡, 지하층 100㎡ 이하)을 이미 초과하고 있어 증축은 불가하나, 2차에 걸쳐 허가

(4) 도립·군립공원 법정계획 미수립 등 관리 소홀

- (규정)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대장(공원지정, 공원계획,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을 작성하여 보관
※ (관련 규정) 「자연공원법」 제17조의3
- (사례) ○○군은 ○○○도립공원의 공원관리대장 미작성, ○○군립공원의 공원보전·관리계획 미수립, 자연자원조사 미실시, 공원대장 미작성

(5)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승인사항 미통보

- (규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승인한 기관은 승인일로부터 20일 내에 인·허가 등의 내용을 부과·징수기관(부서)에 통보하고, 1개월 내에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 통지
※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 (사례) ○○○도 건설과에서는 ○○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나, 사업결정고시 이후 28개월이 경과하고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부서인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84백만원이 미부과되는 결과 초래

(6)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업무 소홀

- (규정)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존속기간 만료 시에는 보호구역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고 보호구역내에는 안내판, 표주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함
- ※ (관련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사례 1) ○○군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당초 지정·고시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호구역 재지정 또는 지정 해제 조치 없이 방치
- (사례 2) ○○시는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안내판 또는 표주를 설치하지 않고,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도면을 갖추어 두지 않고 있음

(7)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 (규정)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에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배부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수렵면허 소지자 및 수렵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지역 리·동 단위로 포획허가
- ※ (관련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사례) ○○군은 00건의 포획허가를 유해야생동물 종류별로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 허가, 00건은 수렵보험기간 초과자 허가, 00건은 포획지역을 군 전체로 허가

(1) 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부적정

- (규정)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최대 5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 모두 납부

※ (관련 규정) 「수도법」 제71조, 「○○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사례) ○○○광역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35개 사업(개발사업, 대규모 건축시설)을 실시계획인가후 3개월이내 미부과, 수돗물 공급 이전에 일괄 부과·징수

(2)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정산 부적정

- (규정) 상·하수관로 등 설치공사 정산 시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근로자(일용 및 상용)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

※ (관련규정)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납입확인서 납입 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한하여 보험료 등 정산

- (사례) ○○시는 ‘○○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정산 시 상용근로자에 증빙서류 등 검토없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 지급

(3)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 (규정)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는 시설 설치 후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

※ (관련 규정) 「수도법」 제74조, 「하수도법」 제20조

- (사례 1) ○○군은 관내 4개소 배수시설 및 상수도관망(811km)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미실시
- (사례 2) ○○시는 관리대상 하수관로 1605.5km 중 1,356.5km가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으나 기술진단 미실시

(4)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준공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중에는 정기적(연2회이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를 요구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 (사례) ○○시는 이미 준공한 상수도시설 공사 00개소에 대한 담보책임기간(2~3년)이 1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하자검사 미실시

(5)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시공검사 부적정

- (규정) 건설공사 시 표준시방서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각 공종마다 설계도서 및 계약서대로 시공되는지 육안·측량 등 검측업무, 품질시험, 준공검사 등을 실시

※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 (사례) ○○시는 상수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강관접합부 내부도장 두께측정, 내부도장 누락여부 검사, 수도관 절연 검사 등 표준시방서에 따른 시공검사 미실시

(6) 정수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 (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기준에 맞게 배치
 - ※ (관련 규정)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사례 1) ○○시는 관할 배수지에서 유리잔류염소가 0.1mg/ℓ 이하로 00회 측정되고 있으나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 미 실시
- (사례 2) ○○군은 운영 중인 정수시설에서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및 불활성화비 검사 미 실시,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지 않고 매월 검사결과를 환경부에 미보고
- (사례 3) ○○시는 운영 중인 ○○정수장(23만톤), ○○정수장(27만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나 추가 배치하지 않고 운영
 - * (시설규모 10톤 이상~50만톤 미만)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 각각 배치

(7)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시설 관리 부적정

- (규정)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폐지가 결정되면 원상복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후 시설 사용
 - ※ (관련 규정)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 (사례) ○○시는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폐지결정된 소규모수도시설 중 일부 시설은 지하수 이용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농업용으로 사용, 일부 시설은 토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방치

(8) 배수지 시설 기준 부적합 및 운영·관리 부적정

- (규정) 시설용량이 1,000톤/일 이상인 정수시설의 배수지는 수질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고 2년마다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배수지의 용량은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 규모로 설치
 - ※ (관련 규정) 「수도법」 제1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7조
- (사례 1) ○○시는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미설치하였으며, ○○군은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도검사(매2년) 미실시
- (사례 2) ○○시 관할 배수지 4개소의 시설용량이 수도시설 기준 대비 570m³ ~ 9,200m³ 각각 부족한 상태로 운영

(9) 정수장 유량계 관리 소홀

- (규정) 정수시설의 정확한 유량계측을 위해 유량계에 대한 유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 연1회 이상 비교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 (관련 규정) 「수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 2007.10)」
- (사례) ○○시는 정수장 유량계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매분기 정기 점검 및 비교측정 미실시

(10) 수도시설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관리 부적정

- (규정)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을 사용
 - ※ (관련 규정) 「수도법」 제14조
 - ※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관(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와 제품(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등),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콘크리트 수조 등)

- (사례) ○○군은 노후관로 개량공사 등 수도시설 4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제품을 사용

(1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 (규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후 3개월 이내 공사착공(3개월간 미착공 시 신고효력 상실),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음용수는 2년, 생활·농어업·공업용수는 3년마다 수질검사 실시

※ (관련규정) 「지하수법」 제8조의2, 제9조, 제14조 및 제20조

- (사례 1) ○○시는 최근 3년간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신고)한 시설 중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미이행, ○○군의 00개 시설은 이행보증금 미예치
- (사례 2) ○○시는 최근 3년간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한 시설 중 000개 시설이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나 지하수개발 신고 효력 상실 통보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Ⅲ

하수도 분야

(1) 하수도 설치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 (규정)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현지여건 변경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후 공사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검사한 후 대가 지급

※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제18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 (사례 1) ○○시는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시설(간이흙막이) 미설치 구간 및 규격과 상이(H=3m→2m, 2.5m) 하게 설치된 구간에 대한 공사비 부당 지급

- (사례 2) ○○군은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로 공사를 설계도서에 반영된 야간공사가 아닌 주간공사로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야간 할증공사비 부담 지급
- (사례 3)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공사가 당초 설계도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수밀불량 맨홀뚜껑 (볼트부분) 000개를 시공하였으나 확인 없이 준공처리

(2) 하수관로 설치사업 품질검사 및 대가지급 부적정

- (규정) 하수관로 설치를 끝내면 적정 공사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서·설계서 등을 검사(관로CCTV, 수밀·수압시험 등)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사례 1) ○○시는 “○○○일원 공공하수도 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관로 설치검사 품질시험 중 수압 및 연막시험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나, 검사대가 부담 지급
- (사례 2) ○○군은 하수관로 00개 구간 CCTV 영상을 조작하여 납품하였으나, 검사대가 부담 지급
- (사례 3)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오수 및 우수관로 준공 전에 합동 검사결과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검사를 완료
- (사례 4) ○○구는 품질관리를 위한 수밀검사 및 CCTV 조사는 발주자가 직접하거나 분리발주하여야 함에도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시공사가 검사하도록 함

(3)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물가변동금액(ES) 정산 부적정

- (규정) 정산항목*의 경우 물가변동금액**에 대하여도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에 한해 지급

* 지출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정산하는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사례) ○○시는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정산항목의 물가변동 금액의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로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한 준공금 및 기성금 부당 지급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부적정

- (규정) ○○시 조례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착공후부터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고지서 발부·징수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착공 후 30일 이내 30%, 준공중간시 30%, 완공예정일 40%로 3회 분할 납부
- ※ (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61조, 「○○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 (사례 1) ○○광역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5개 사업(공동주택)을 착공 후 30일이 초과하였으나, 1회분 미부과
- (사례 2) ○○광역시는 원인자부담금이 3억원 이상인 2개 사업(공동주택)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3회 분할하여 징수하지 않고, 사업완공 시점에 일괄로 부과·징수

(5)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 추가업무 지시 부적정

- (규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당초 계약 상대방에게 추가 업무를 지시 가능
-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사례) ○○시는 ‘A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신설 설계 용역’건은 일반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으로 새로 계약을 하여야 하나,
 - A하수처리장과 전혀 관련없는 ‘B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추가 지시

(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 (규정)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수로 공급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의 원수와 재처리수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

※ (관련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 (사례) ○○광역시는 A환경공단에 재이용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A환경공단은 하수처리수의 재처리수 수질관리를 위해 원수 및 재처리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음

(7) 하수도시설 설계용역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미실시

- (규정) 계약금액 2억1천만원 이상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 용역 평가 기간

-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해당용역의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사업 관리용역)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준공후 60일까지

- (사례) ○○시는 자체 발주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기간내 용역평가 미실시

(8)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대행계약 등 부적정

- (규정)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단순관리 대행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19조의2

- (사례) ○○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대행하면서 성과평가를 최근 4년간 2회 미 실시, 성과평가를 계약 만료 전에 하지 않고 계약 완료 후 약 2개월 경과하여 실시

(9)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개선방안 미이행

- (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변경), 지자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
※ (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5조 및 제11조
- (사례 1) ○○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소규모하수도 2개소를 인근 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등 통합 처리하고, 1개소는 하수량 부족에 따른 하수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 미이행
- (사례 2) ○○시는 A 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므로 B하수처리장으로 처리구역을 조정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으나 펌프장 설치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부서간 이견으로 기본계획 미이행

(1)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허가 부적정

- (규정)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이내인 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

※ (관련 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사례) ○○시 상수도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km이내 개발행위 허가 협의건에 대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검토없이 조건부허가 의견을 회신, 허가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허가 처리

(2) 수변구역내 불법시설물 관리소홀

- (규정) 한강수계특별법에서 정하는 수변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을 새로(용도변경 포함) 설치 불가

※ (관련 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례 1) ○○군은 수변구역에서 일반건축물로 허가받은 시설을 불법 증축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용금지,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 건축물 불법증축(건축법), 숙박업 미신고(공중위생관리법)

- (사례 2) ○○군은 수변구역에서 민박시설로 신고(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 연면적 230㎡미만으로 규정)된 펜션에서 신고면적(230㎡)을 초과한 불법 증축 시설 및 미신고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3) 폐수처리업 및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 (규정)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폐수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

※ (관련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 (사례) ○○광역시는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잘못, 폐수처리업과 병행 처분 미적용 등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10일) 2회, 폐수처리업 영업정지(10일) 2회 행정처분 미실시

※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600% 이상 초과시 2단계 높은 4차에 해당하는 차수(조업정지 10일)를 적용하여야 하나 2차(개선명령) 적용, 이때 폐수처리업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처분(영업정지 10일) 하여야 하나 미처분

(4)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 (규정)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초과배출량,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금액 등을 산정기준에 맞게 부과

※ (관련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41조

- (사례 1) ○○○도는 ○○업체에 대해 초과배출량,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5.8027→5.8001), 지역별 부과계수(1.0→1.5),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액(2백만원→0원)을 잘못 적용하여 00백만원 과다 부과
- (사례 2) ○○시는 ○○업체에 대해 지역별 부과계수(2.0→1.5), 사업장 규모별 부과액(5십만원→0원)을 잘못 적용하여 00백만원 과소 부과

(5)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 (규정)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정도·횟수에 따른 차수 적용, 위반 확인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행정처분, 행정처분 후 일정 기간 내 현지 확인 등 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5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 (사례 1) ○○○군은 화학물질산소요구량(COD)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600% 이상 초과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2단계 높은 차수인 조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1차에 해당하는 개선명령 처분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행정처분 차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 200%~600% 미만은 1단계 높은 차수, 600% 이상은 2단계 높은 차수 적용

- (사례 2) ○○시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총 00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한인 위반확인일로부터 5일을 경과하여 처분(최장 81일 지연)

- (사례 3) ○○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등 제때 미실시

* 조업정지 등 이행여부 확인시기(「통합지도점검규정」 제22조)

- 최초확인은 2일 이내, 최종확인은 처분종료일·행정명령 이행완료일
- 확인 횟수 : 1개월 미만은 2회 이상, 1~6개월은 3회 이상, 6개월 이상은 4회 이상

(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 부적정

- (규정) 대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처리하고, 실제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징수

※ (관련 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 대단위 축산농가: 돼지사육 5,000두 또는 사육면적 5,000m² 이상

- (사례) ○○군은 최근 3년간 가축분뇨 연평균 반입량 8,530톤 중 허가대상 반입량은 5,961톤으로 69.9% 차지, 실제 처리비는 톤당 44,430원이나 반입 수수료는 허가대상 1만원(신고대상 9천원) 징수

(7)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관리 소홀

- (규정) 지자체는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

※ (관련 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사례) ○○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15개소, ○○군은 9개소, ○○군은 7개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재활용시설 관리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

(1)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중과세 미부과

- (규정)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분의 주민세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세율(250원)의 100분의 200(500원)으로 중과하여 부과

※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81조,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내지 제131조

- (사례) ○○○도 환경보전과에서는 행정처분 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00개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역을 누락하여 ○○군 세무과에 통보, 해당 세무과에서는 사업소분 주민세 중과세 00백만원 미부과

(2)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 소홀

- (규정)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오염물질 발생량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허가증을 발급

※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환경부)」

- (사례) ○○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증에 연료명·연료사용량 미기재, 대기오염물질(Co) 누락, 원료물질명을 확인이 곤란한 영어 약어를 기재하는 등 허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3)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사업장 과태료 미부과

- (규정)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한 내*에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준)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 신규교육
일로 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

- (사례) ○○시는 환경기술인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00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1)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부적정

- (규정)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3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30cm 이상의 복토를 하고 완료 시 최종복토 실시

※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31조

- (사례 1) ○○시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정기검사 미실시
- (사례 2) ○○시는 ○○매립시설의 1단계 용량이 이미 도달하였으나 최종 복토를 하지 않고 우수배제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 다량 발생, 자체 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수량 증가로 운영 장애 초래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 부적정

- (규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부도,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 징수

※ (관련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 (사례) ○○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가 취소된 후 4회에 걸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하고 있음에도,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미부과

- (규정) 택지개발(30만㎡ 이상)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

※ (관련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례) ○○군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면적 306,426㎡)이 착공되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미부과, 사업시행자는 착공계(납부계획서 제출)를 사업 승인부서에만 제출하고 설치비용 부과부서인 환경과에는 미제출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부적정

- (규정) 건설폐기물 보관·수집·운반·처리기준이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 시 적용 차수를 한 차수 증가하여 가중 처분

※ (관련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사례 1) ○○시는 전자정보프로그램 배출자 입력기한을 1년내 2차례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2차에 해당하는 7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1차와 동일한 50만원 부과
- (사례 2) ○○시는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덮개 미설치)을 1년내 2차례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2차 부과시 3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1차에 해당하는 200만원 부과
- (사례 3) ○○시는 ○○업체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혼합보관)을 위반하여 이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100만원 부과

(5)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갈음 부적정

- (규정)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①이용자 막대한 지장, ②환경오염 우려, ③천재지변 등으로 영업 지속 불가피)는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28조

- (사례) ○○시는 폐기물처리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시 최초 위반인 점, 고의성이 없는 점 등 법에서 정한 과징금 처분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여 처분

(6) 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미준수

- (규정)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계획서(시·도) 및 재활용실적보고서(시·군·구)를 제출

※ (관련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 (사례) ○○시는 자체 발주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도로사업 등 공공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계획서도 미제출

(7) 폐기물배출자 실적보고 관리 소홀

- (규정) 사업장(건설)폐기물배출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연도내 종료된 건설공사는 준공 후 15일 이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4조

- (사례) ○○시는 관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익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미제출하였으나 제출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1)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등 미통보

- (규정)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적정통보 시 반입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 (관련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 (사례) ○○구는 오염토양 정화책임자가 제출한 토양정밀조사 2건, 오염토양정화조치 1건의 이행완료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미통보
 - 또한, 오염토양 정화책임자가 제출한 5건의 오염토양정화반출 계획서에 대한 승인사항을 반입지 관할 지자체에 미통보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관리 부적정

-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 시 사용하고,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 (관련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사례) ○○시는 ‘○○위생매립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2년 주기) 미실시, 주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점검대장 기록·비치 미이행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적정

- (규정)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연 1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30일내에 지자체에 보고, 미측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제12조

- (사례) ○○시는 다중이용시설 ○○개소(어린이집 등)에서 실내 공기질을 미측정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미이행

(4)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소홀

- (규정) 지자체장은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천㎡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결과 공개 (지자체 홈페이지 등)

※ (관련 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 (사례) ○○시는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천㎡ 이상인 00개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 비산정도 미측정

경제 · 산업 · 농업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 위 업 무	감사 착안 사항
경제·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창업) 승인 관련 민원처리 등 적정 여부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허가제 등 추진 부적정 - 담배소매인 지정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농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 농지취득증명(주말·체험 영농용) 발급 업무 - 직불금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업무 처리 적정 여부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적정 여부 - 불법전용 적발 농지에 대한 조치 적정 여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여부

판단 기준

-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게 하고 있음.
-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따라서 ○○○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3일 이내,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은 5일 이내(5일 이내 연장 가능)로 하고, 보완기간은 행정청에 도달한 날까지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됨.

지적 사항

- ○○○에서는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새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보완요구 일수를 신청인(기업체)이 실제 제출한 보완 완료일보다 길게 입력·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지연시켜 처리 기한보다 2~7일 지연 처리.
- 또한 '19. ○. ○○. 접수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하면서 신청인(기업체)에게 관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처분 절차 완료 후 완료신고"토록 보완 요구하여 당초 처리기한보다 15일 초과하여 지연 처리함으로써 신청인이 신속·공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

유의 사항

- ☞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준수 및 불필요한 서류인지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산지를 복구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 등의 사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민원 신고 및 사건인지 등으로 적발한 불법 산지전용 및 산지 훼손행위에 대하여 8건(8,483㎡)은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고, 4건(3,928㎡)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8건(8,483㎡)은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설계서가 기한 내 미제출 되었음에도 과태료(3,000천 원)를 부과하지 않는 등 불법 산지복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유 의 사 항

- ☞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 조치사항 확인,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조치

판 단 기 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라고 되어 있음.
-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Ⅱ-2-나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용도변경 및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농어촌 민박의 규모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및 제130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농어촌민박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옥외계단을 설치해서 1층 객실(6실)과 2층 거주자 공간(3실)을 서로 분리·독립하는 등의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거주자 공간(3실)을 객실용 키즈 놀이터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이었으며, 민박사업자(소유자 1인, 임차인 2인)는 주민등록상 전입한 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었음.
- 또한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기능 설정, 사업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 입간판(상호 표기 : ○○풀빌라) 등 하나의 펜션으로 소개하고 있고, 모든 객실의 예약안내 발송문자는 소유자(○○○) 입금계좌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차인은 무소득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로는 소유자 1인이 하나의 펜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에도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유 의 사 항

-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수리 후 관련 시설, 실제 운영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도·점검

판 단 기 준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지에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등), 묘지 관련 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한편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의 제출) 내지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에 따르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또는 보증서)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의무자가 농지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복구예치금의 직접 사용 등으로 해당 농지를 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생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종교사찰, 자연 장지 설치 목적으로 신청한 총 5건의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면서 허가제한 면적(1,000㎡)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시 ○○과에서는 총 5개소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상복구 명령 및 복구예치금의 직접 사용 등 원상복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하는데도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음.

유 의 사 항

- ☞ 신고 수리 후 관련 시설, 실제 운영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도·점검

판 단 기 준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 VI.(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이를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군에서는 '21. ○.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면 ○○리 ○○○○(617m²) 1필지에 대해 처분의무기간('21. ○. ○○. ~ '22. ○. ○○.) 내에 해당되는 '21. ○. ○○.에 단독주택(전용면적 510m²)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음.

유 의 사 항

- ☞ 「농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시 처분의무기간 부여 여부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함.
- 그리고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처분대상농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며, 「농지법」 제62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처분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최근 4년간('18년~'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40필지(25,857㎡) 중에서 ○시 ○면 ○리 ○번지 등 28필지(16,980㎡)의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 이후 처분명령을 통지하지 않았고, '20. 7. 22. 최초 처분명령 통지 이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은 ○시 ○면 ○리 ○번지 등 10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21년 이행강제금 ○○○백만 원을 부과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에 대해 부과·징수 철저

판 단 기 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4조 등에 따라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군 ○○○○과에서는 (주)○○건설의 경우 실질자본이 법정자본금에 미달함에도 부실 자산을 제외하지 않은 자본총계를 실질자본으로 잘못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질자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실질자본이 법정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대상인 23개 업체에 대해 건설행정 정보시스템에 무혐의로 입력하는 등 전문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유 의 사 항

- ☞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등 확인철저

판 단 기 준

1. 우선 지정대상 자격이 없는 신청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

2. 담배소매업 지정불가 장소에 대한 소매인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약국, 병원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미실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이 「담배사업법」 등을 위반하여 그 담배소매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소매인으로부터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와 그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7일 이상)를 해야 함

지 적 사 항

1. 우선 지정대상 자격이 없는 신청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 ○○시에서는 일반인이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을 받기 위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일반인만 소유권(100%)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담배소매인의 우선 지정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추첨에 참여시켜 소매인으로 지정

2. 담배소매업 지정불가 장소에 대한 소매인 지정

- ○○시에서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 ○○○○○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공사)으로서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음에도 소매인으로 지정을 하는 등 담배소매업 지정불가 사업장 4곳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함.

3.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미실시

- ○○시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358건의 폐업 신고(지정취소 포함) 등을 처리하면서 307건에 대해서만 신규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하고 51건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하지 않았음.

유의 사항

- ☞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대상 자격 및 지정장소 여부 등 확인 철저

9 불법전용산지 등에 대한 조치 소홀

판 단 기 준

-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없이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용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산지를 복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 등의 사법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허가권자는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에서는 ○○면 ○○ 산2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출장결과보고서('18. ○. ○○.)에 첨부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통해 같은 필지 내에 또 다른 불법 전용과 인접한 산 19번지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불법산림훼손 신고(○○면 ○○리 산19번지 외 1필지)를 받고 '20. 7. 현장 점검을 하여 불법사실을 명확히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 까지도 해당 산지가 골재 및 사토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또한 민원신고 등으로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산지훼손행위 22건 중 ○○면 ○○리 산47-2번지 등 10건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미복구된 채 방치되어 있음에도 원상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복구준공검사 등 이행 철저

토목 · 건축 · 안전 · 교통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 위 업 무	감사 착안 사항
토목 분야	<p>■ 설계적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지장물 등 현장조사 등이 실제 현장상황에 맞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설계내용 및 변경절차·내용이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에 적합 여부 <p>■ 하도급 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여부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의 적정 시행 여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 여부 - 높이 2m 이상 굴착시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여부
건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감리 시행 여부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 관리 적정 여부 - 건축신고 업무처리 적정 여부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적정 여부 - 하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인 배치 적정 여부
안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영향평가 협의 조건 준수 여부 -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 공사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 여부 - 건축물 해체 시 관리청 신고 여부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적정 여부 - 책임보험 미가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

판단 기준

-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설계도면 및 지하 시설물 도면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마친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군에서는 '20년 ○○군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도로점용(굴착) 허가기간 경과 시 준공확인 신청 독촉,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처분을 받았는데도 준공확인 미이행 68건 중 10건(15%)만 준공확인 처리하였고 58건(85%)은 준공확인을 하지 않았음.
- 이 과정에서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9건의 도로점용공사의 경우 피허가자가 준공확인 신청을 하였는데도 1년 7개월 동안 준공확인(검사)를 하지 않음.
- 또한 나머지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39건의 도로점용공사는 준공 확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준공확인 신청 독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유의 사항

- ☞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등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 실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철저

판단 기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소유권 등을 기부를 받을 때에는 기부자의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기부채납하지 못하며,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 ○○시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34㎡(전·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동의함에 따라 『○○ ○○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지만 '21. ○. ○○. 공사완료 시점까지 기부채납 결정,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부채납 동의서 징구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저당권(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개인재산에 기부채납도 없이 공용도로가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함.

유의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 이행 철저

판단 기준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를 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24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와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시 ○○○○구 ○○○○과 등에서는 '19. ○. ○.부터 '20. ○○. ○○.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71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

유의 사항

-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철저

판 단 기 준

- ○○군 ○○○○과에서는 ○○연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15. ○.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인 ○○읍 ○○리 1362외 7필지에 ○○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공청사 부지에서 제외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 후 건축 협의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였어야 함에도, 군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없이 '21. ○. ○. ○○○○과에 ○○연구시설 증축을 건축협의 요청하고 '21. ○. ○. 건축 협의 처리되자 '21. ○○. ○○. 건립공사 착수함.
- 그리고 건축협의 처리 과정에서 ○○군 ○○○○과 ○○○○담당에서는 건축협의 요청 시 제출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이 교육연구시설로 작성되어 있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에는 교육연구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조치 계획서 제출을 요한다고 보완 요구하였으나, '21. ○. ○○. ○○○○과에서는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등 조치 없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 용도만을 공공청사(○○원)로 수정 제출하였고 ○○○○담당에서도 실 사용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1. ○. ○○. 실시계획을 인가함.
- 또한 ○○군 ○○○○과 ○○○○담당에서는 군계획시설 부지에는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과에서 '21. ○. ○. 건축협의 요청한 ○○연구시설 용도 그대로 보완 요구 없이 '21. ○. ○. 건축협의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군 ○○○○과에서는 ○○연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2,050.49㎡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 시험관리인인 초급 품질관리자 1인이 배치되어 있어 품질관리자의 품질관리활동비는 공사금액에 계상할 필요가 없음에도 착공내역에 반영된 품질관리활동비 28,153천 원에 대하여 감액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18. ○. ○○. 마지막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계속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품질관리자로 배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체 요구하지 않음.

지 적 사 항

- ○○군 ○○○○과에서는 '21. ○. ○○. 설계용역업체인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완료계가 제출되자 검사공무원 지정 없이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음에도 감독 공무원이 준공검사 후 작성·날인한 용역완료 검사조서에 따라 설계 대가를 지급함.

유 의 사 항

- ☞ 사업 추진 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건축 허가 시 관련 규정 확인

판 단 기 준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따르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토지분할, 죽목벌채,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벌칙)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고발)에 의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행정대집행)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 ○면 ○○리 ○○○ 등 13건은 원상회복(1·2차 계고)하도록 시정명령한 후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13,582천 원)하지 않았고, ○○시 ○면 ○○리 산222-1 등 2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 사업 추진 시 군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건축 허가 시 관련 규정 확인

판 단 기 준

1. 계비온 옹벽 구조검토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소홀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등에 따르면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흙의 압력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탈면을 굴착한 상태에서 깎기면 현황도를 작성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비탈면이 붕괴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괴형태에 대한 유발원인을 고려하여 깎기비탈면에 대한 안정해석을 실시한 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

2. 비탈면 옹벽 구조물 형식 변경 절차 및 설계변경 부적정

- 옹벽 등 구조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3. 붕괴구간 구조물 시공상태 및 하자 여부 원인규명 조치 미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4. 산지전용(변경) 협의 없이 공사 추진

-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선형을 변경하고 전용받은 산지면적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변경) 허가에 대해 해당부서에 협의를 받아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함.

지 적 사 항

1. 계비온 옹벽 구조검토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소홀

- ○○시 ○○○○과에서는 블록식 옹벽을 계비온 옹벽¹⁾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비온 옹벽과 흙의 거동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지 않았고, 비탈 깎기면 현황도를 통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붕괴토로 이루어진 비탈면에 대해 전문가의 안정해석도 실시하지 않고 계비온 옹벽으로 설계변경한 후 '19. ○○. ○○. 시공함.
- 그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 ○. ○○. 계비온 옹벽으로 변경 시공한 사면이 붕괴되었고 (사)한국지반공학회에서 비탈면의 안정해석 결과 설계기준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면 붕괴로 인해 복구공사비 약 117백만 원이 추가 소요됨.

1) 철사로 엮은 망 안에 돌을 가득 채워 만든 옹벽으로 작은 돌들이 주로 사용됨

판 단 기 준

2. 비탈면 옹벽 구조물 형식 변경 절차 및 설계변경 부적정

- ▣ ○○시 ○○○○과에서는 옹벽구조물을 변경하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로선형을 변경할 수 없는 구간임에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3. 붕괴구간 구조물 시공상태 및 하자 여부 원인규명 조치 미흡

- ▣ ○○시 ○○○○과에서는 비탈면 붕괴 이후 계약상대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한 용역에 따라 토질에 대한 설계기준 안전율 미확보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검토는 거쳤으나,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옹벽 등 구조물의 시공상태 및 결함 등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

4. 산지전용(변경) 협의 없이 공사 추진

- ▣ ○○시 ○○○○과에서는 도로선형 변경으로 편입되는 산지가 전용받은 면적과 달리함으로 산지전용(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승인부서와 협의 없이 공사를 추진함.

유 의 사 항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등에 따른 구조검토 철저
- ☞ 안전과 관련 있는 옹벽 등 구조물의 구조변경 시 당초 설계자 의견 반영 철저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철저
- ☞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선형을 변경하고 전용받은 산지면적을 조정할 경우 산지전용(변경) 협의 철저

판 단 기 준

1. 원가계산서 임의 조정 후 국외 사례조사비 등 반영 부당처리

- 「지방계약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설계가격의 원가계산에 대해 경상남도예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아 확정된 기초금액의 원가계산서 대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및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3조(용역의 준공) 등에 따르면 설계용역을 감독, 검사할 때에는 용역 완료 전에 용역성과를 정밀하게 확인·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여 용역성과물이 해당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해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은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내용과 계약금액을 조정한 뒤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하천제방 수목 식재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사업 착공 부적정

- 「하천법」 등에 따르면 하천제방에는 교목류 등 수고가 1m 이상인 키 큰 나무를 식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하천구역에 환경상 필요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하려면 미리 수리계산서가 첨부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 협의를 한 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4. 설계용역(측량부분) 감독 부적정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소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등에 따르면 용역감독을 할 때에는 발주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특정용역 항목이 감소 될 경우 당초의 계약내용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다르다는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이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지 적 사 항

1. 원가계산서 임의 조정 후 국외 사례조사비 등 반영 부당처리

- ○○시 ○○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당일 계약심사를 통해 확정된 원가계산서를 임의 조정하여 국외사례 조사비와 부분 조감도 작성비 35,000천 원이 반영된 원가계산서를 새로 작성한 후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

2.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1) 설계용역 감독 소홀

(가) 국외사례 조사비 감액 미조치

- ○○시 ○○과에서는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을 하면서 국외사례 조사가 국내사례 조사로 대체되어 계약금액에 반영된 국외사례 조사비 21,643천 원 중 762천 원만 집행되었는데도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사실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계약부서에 제출하지 않아 국외사례 조사비 20,881천 원 상당금액을 감액시키지 못하였음.

(나) 계약내용변경을 통한 용역성과품 변경 미조치

- ○○시 ○○과에서는 도시 바람길 숲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과업지시서 상의 성과품 목록과 다르게 분리하여 작성된 설계도서가 납품되었는데도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해 과업지시서 상의 용역성과품 목록과 실제 납품된 용역성과품 목록이 일치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용역성과품도 ○○시에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하지 않았음.

2) 설계용역 검사 소홀

(가) 국외사례 조사비 부당지급

- ○○시 ○○과에서는 '21. ○. ○. 설계용역사가 계약금액에 반영된 국외사례 조사비에 대한 정산 없이 용역검사원을 제출하였으므로, 국외사례 조사비 21,643천 원 중 실제 소요된 사례조사비 762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81천 원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검사조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시킨 뒤 대가가 지급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정산이 필요하다는 검사 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21. ○. ○○. 설계용역사에게 20,881천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음.

(나) 검사조서 부당 작성

- ○○시 ○○과에서는 용역성과품인 설계도서가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각 단계별로 분리되고 교통처리계획도 등 일부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성과품이 납품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함.

3) 감리용역 감독 및 공사 준공검사 소홀

(가) 계약내용과 다른 지피류 식재에 대한 감리용역 감독 소홀

- ○○시 ○○과에서는 감리자가 시공자에서 지피류인 풍지초의 종류를 임의 변경하여 식재한 사실에 대해 검토·확인하지 않고 이를 ○○시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감리용역을 계약내용과 같이 이행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22. ○. ○. 감리용역이 준공될 때까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용역 감독업무를 수행.

(나) 계약내용과 다른 지피류 식재에 대한 준공검사 소홀

- ○○시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인 대영종합건설(주)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식재하고 '21. ○○. ○○.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그 사실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적고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이 조정되도록 하지 않고, 같은 해 12. 23.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같은 해 12. 29. 15,100천 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도록 하였음.

3. 하천제방 수목 식재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사업 착공 부적정

- ○○시 ○○○○과에서는 '21. ○. ○○. ○○시 ○○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천 하천제방에 수고가 4m인 편백나무와 수고가 1m인 홍가시나무 등 교목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면 수고 1m 이상인 나무는 하천제방에 식재가 불가능하다는 협의의견을 통보하거나 이를 「하천법」에 맞게 관목류나 수고가 1m 이하인 키 작은 나무로 변경하도록 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한 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1. ○. ○○. ○○시 ○○과에 협의의견을 통보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별도 협의 없이 교목류 등 수고가 1m 이상 인 나무를 ○○천 제방에 식재하도록 협의함.
- 또한, ○○시 ○○과에서는 「○○ ○○○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하천인 ○○강의 하천구역에 교목 250주와 관목 1,662주, 총 1,912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도 미리 수리계산서가 첨부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경상남도 하천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지 않고 ○○시 하천담당부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22. ○. ○○. 공사를 착공함.

4. 설계용역(측량부분) 감독 부적정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소요

- ○○시 ○○과에서는 '○○ ○○ ○○○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의 측량 부분에 대한 용역감독을 하면서 '20. ○○. ○○. 측량면적 재산정을 위한 계약 내용의 변경 당시 ○○시 ○○과가 보유하고 있던 ○○신도시사업 설계도면을 설계용역사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그 결과 설계도면을 설계용역사에 제공하고 ○○신도시사업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같이 지형현황 조사와 지장물 조사를 통해 ○○신도시사업 준공 당시와 달라진 수목의 식재 현황을 파악하였다면 측량을 재차 실시할 필요가 없어 측량용역 과업물량의 감소로 38,689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시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 뒤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지 않고 설계용역사로 하여금 물금을 일원 40만㎢ 대한 지형현황측량을 재차 실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38,689천원이 소요되도록 함.

유의 사항

-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지급) 및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용역 감독 및 검사 업무 철저
- ☞ 「하천법」 등에 따른 하천제방 수목 식재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 이행 확인 철저
- ☞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등에 따른 설계용역(측량부분) 감독 철저

판 단 기 준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해야 함.
- 따라서 ○○시에서는 준공정산 시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서류를 확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과 등 ○○개 부서에서는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사례와 같이 도급자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단순노무자 노무비를 ○○시에 청구해 지급받은 후, 사업 준공정산 시점에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시에 청구하면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시 첨부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42명의 인건비를 이중 청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급자에게 총 212,520천 원(안전관리비 157,187천 원, 환경관리비 55,333천 원)을 지급하였음.
- 또한 ○○○○회관 건립사업은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의 인건비 20명의 사용(입금)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도급자에게 8,863천 원을 지급하였음.

유 의 사 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정산 철저
- ☞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도급자 제재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또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 3. 31.)」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지침에 따라 시공자는 2m이상의 고소작업,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 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작업허가제 도입이 의무화됨.

지 적 사 항

1. 안전관리계획 통보절차 소홀

- ○○○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10건의 공사 중 3건의 공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통보하지 않거나 20일이 경과한 이후 승인 통보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2.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의무도입 소홀

- ○○○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10건의 공공공사 중 4건에 대해 작업허가제를 의무 도입하여 시행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음.

3. 민간공사에 대하여 작업허가제 시행 안내 소홀

- 6개 부서에서는 340건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인가·허가 등을 하면서 그 중 23건에 대해서만 작업허가제 시행을 안내(권고)하고 나머지 93.2%, 317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허가제 시행을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유 의 사 항

-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통보절차 이행 및 작업허가제도 시행 철저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판 단 기 준

1.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르면 임차기간 만료 후 차고지 설치 갱신을 하지 않아 차고지를 미확보 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는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여야 함.

2.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위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경우 지급된 유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41명에 대하여 총 43건 7,22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0명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고지를 미확보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음.

유 의 사 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 조치 철저

11 자동차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판 단 기 준

1.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43조(자동차 검사)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종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를 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검사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2.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르면 임차기간 만료 후 차고지 설치 갱신을 하지 않아 차고지를 미확보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차는 사업 전부정지 30일, 2차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1.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41명에 대하여 총 43건 7,22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0명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고지를 미확보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음.

유 의 사 항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등 업무 처리 철저

12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판 단 기 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 마다 1만 원을 가산하여 최고 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함.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천시 건설과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최소 2만원부터 최고 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간 내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검사 지연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필자에게는 전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총 55건 21,2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음.

유 의 사 항

- ☞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부과 철저

13 하수도중점관리 침수대응사업 공법선정 업무 등 추진 소홀

판 단 기 준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검토 부적정

- 흙막이 가설구조물의 최대 높이가 2.0m 이상인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7조 등에 따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서류(서명된 구조검토서)를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2. 특허공법(제품) 설계 반영 부적정

- 특허공법(제품)을 설계에 반영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지방계약법」 제16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등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확인하여야 하고 단면보수에 필요한 특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대용품의 비교와 유사 기술과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 담당부서(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검토 부적정

- ○○는 '19. 1. 3. 계약상대자가 높이 8.0m(L=835m)인 흙막이 가설구조물 공사 착수 전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에 필요한 관계 서류(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구조검토서 등)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승인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

2. 특허공법(제품) 설계 반영 부적정

- ○○는 '18. 10. 2. 실시설계에 반영된 비굴착 단면보수에 대하여 PR공법을 적용하면서 시공성, 경제성 등 공법 간의 비교·분석과 계약부서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적용한 공법(제품)의 기능이 중복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105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함.

유 의 사 항

-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흙막이 가설구조물의 최대 높이가 2.0m 이상인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 시 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서류 토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철저

14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판 단 기 준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대한 무혐의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 영업정지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에게 관련 사항을 재위임함.

지 적 사 항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대한 무혐의 처분

- ○○시에서는 조사대상 업체 중 5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대상임에도 무혐의 처리.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

- ○○시에서는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총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문서를 접수하였으나, 그 중 6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을 접수만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조사 및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철저

문화 · 관광 분야

1 관광농원사업 사후 관리업무 부적정

판 단 기 준

-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감독 등) 및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광농원 사업자에게 그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의 사업정지, 관광농원에 재배작물 1년 이상 미경작, 관광농원 규모나 시설 기준 위반,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 없이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장의 폐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면 ○○리 1284 등 ○필지(4,124㎡), ○○○관광농원이 '19. ○. ○○. 영농체험시설인 엄나무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였고, 불법 산지훼손(911㎡), 식점 용도의 무허가 건축물 증축(63.6㎡) 등에 대한 ○○시 산림과('17. 6. 23.)와 건축과('17. ○○. ○○.)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이행제강제금 납부(8백만 원), 고발 등 행정처분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그 이후 기존의 ○○농원 사업장을 승계한 ○○○(현재 사업자)도 영농체험 시설인 엄나무 재배를 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1년 이상 방치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유리온실 설치, 재건축 등 음식점 영업을 주목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적법한 사업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개선명령,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음.

유 의 사 항

- ☞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감독 등) 및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라 ○○농원사업 사업장의 폐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사후 관리업무 철저

판 단 기 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르면 ○○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공원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20일 이내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 부과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시 ○○과에서는 ○○공원에 1차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17. 8. 3.)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17. 10. 25. 공사를 착수하여 기존에 조성된 생태연못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18. 5. 31. 물놀이장을 준공하였음.
- 또한 2차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후 '19. 11. 21.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심의 결정이 되었음에도 추가 심의 절차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절차도 없이 물놀이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 결재를 받아('19. 12. 20.) 기존에 조성된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20. 6. 26. 물놀이장을 준공하였음.
- 그리고 ○○시 ○○○과에서는 '20. 6. 30.과 같은 해 12. 2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인 ○○공원과 ○○공원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각각 인가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자료를 통보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인가 등 절차 이행 철저
-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경남도 환경정책과에 부과 자료 통보 철저

판 단 기 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서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체육시설, 게임제공시설 등 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범죄 경력을 조사하고, 종사자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을 채용 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지 적 사 항

- ▣ ○○에서는 종사자 ○○명(일반직원 ○○명, 시간강사 ○○명)에 대하여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 ○○에서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

판 단 기 준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에 따르면 야영장업(관광객이용 시설업으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야영장업 등록업체는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군에서는 ○○글램핑장이 폐업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숙박사이트에 야영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글램핑장 홈페이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글램핑장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 야영장 시설 등을 구비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또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캠핑야영장은 매월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반기별 점검결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 또는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유 의 사 항

- ☞ 야영장업 등록업체에게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등록기관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 철저
- ☞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및 단속 철저

공공기관 분야

■ 중점 감사사항 체크리스트 ■

단위업무	감사 착안 사항
채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절차·방법 사전규정 및 공고여부(신규채용) ■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 불합리한 제한 여부(신규채용) ■ 채용기준·자격요건 구체적 설정 및 사전공개 여부(제한경쟁) ■ 개별 채용의 절차방법을 통상적 절차방법과 달리 정했는지 여부(특별채용 금지)
채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계획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의 필요성(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유무 - 채용 인원수, 응시자격 요건, 각 시험전형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구체적 여부 ■ 채용계획 수립시 절차(인사위원회 의결 등) 준수 여부 ■ 채용계획 변경 시 필요 절차 준수 여부 ■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기관 사전 협의 준수 여부 ■ 감독기관과 사전협의를 다르게 채용한 경우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주무기관에 보고했는지 여부
채용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공고 실시 및 공고기간 준수 여부 ■ 인사규정, 채용계획에서 정한 경력·자격요건 등에 따라 공고했는지 여부 ■ 채용공고 매체의 적정성 여부(홈페이지, 워크넷 등) ■ 공고 이후 절차·기준 변경 시 절차 준수 및 재공고 여부
서류· 필기·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계획상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 준수 여부 ■ 응시자 제출 서류 진위 확인 여부 ■ 시험지 관리 적정성 여부(문제 유출 방지노력 등) ■ 전형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여부 ■ 사실상 내부인(비상임이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에 준하는 외부위원 위촉 여부 ■ 기피·제척·회피제도 운영여부
합격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필기·면접 등 절차에 따른 합격자 결정 여부 ■ 합격자 결정 시 가점부여 등 평가 적정성 여부 ■ 평정 집계결과와 최종 합격순위의 일치 여부 ■ 합격자 제출서류의 진위확인 여부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 응시자격 미달, 결격사유 해당자의 합격 여부 ■ 최종합격자 변경 여부
친인척 등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위원이 친인척 등이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척·기피·회피 여부 ■ 채용관계자 또는 전형위원의 친인척이 응시한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한 사적 이해관계신고 여부 ■ 신규채용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한지 여부

판 단 기 준

- 「지방○○○ 인사·조직 운영기준」, ○○○ 「인사규정」 제7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등에 따르면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공고를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면접시험 등 시험시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에서는 '21년 한 해 동안 7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의 방침만 받고 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또한 ○○○에서는 '21. 8. 12. 최초 공고한 ○○○ 채용공고에 면접시험 일자를 같은 해 8. 26.(목)로 정하였으나 면접시험일 2일 전에 면접시험 일정을 8. 26.(목)에서 8. 27.(금)로 변경 공고하여 공고시기를 준수하지 않았음.

유 의 사 항

☞ 직원 채용계획 사전심의 누락

2 연구직 채용절차 부적정

판단 기준

- ○○재단은 연구원 채용 시 인사 규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박사급(연구) 인력 채용은 논문심사로 대체 가능], 3차 면접시험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함.
- 전형별 합격배수가 변경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채용심사 과정에서 당초 채용인원의 배수미만으로 심사를 진행 시 재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경상남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재단은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해야 함.
- ○○과는 ○○재단의 직원 채용계획 협의 요청에 대해 법령·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함.

지적 사항

- ○○년 제○차 연구직 초빙 공고 시 석사급 연구원 채용은 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차 필기시험을 논문심사로 부당하게 변경하여 공고하여 「경상남도 ○○재단 인사 규정」을 위반하였고
- 심사 과정에서 채용인원의 배수미만으로 진행을 못하게 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하고도,
 - (○○급) 연구원 1차 서류 심사에서 ○명이 부적격(서류심사 1, 서류전형 평가 1) 처리되어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추가 응시자 모집이나 채용인원 변경을 위한 재공고 등의 절차없이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위반하였음.
 - (○○급) 응시분야와 응시자의 경력 불일치로 부적격 처리되어 재공고 후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재공고 절차 없이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공고내용을 위반하였음.
- 재단의 인사규정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하위 규정인 「경상남도 ○○재단 직원채용 시행세칙」 제4조의 “2차는 필기시험 또는 논문심사를 실시한다.”는 규정만 확인하여 재단에서 인사규정과 달리 필기시험을 논문심사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음.

유의 사항

- ☞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계획 협의 요청에 대해 법령·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판 단 기 준

1. ○○○○센터 환경개선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부당 체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계약에 한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천 5백만 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로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5조의2(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할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사법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1. ○○○○센터 환경개선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부당 체결

- ○○에서는 '21. ○. ○. (주) ○○사와 "○○○○○○ ○○○○센터(3층)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94,800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업의 내용이 유리칸막이 설치, 벽체 디자인 마감, 천장철거 및 마감, 카페트 깔기 등의 실내 건축 공사로서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을 요구하는 물품·용역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이 아닌데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반영하고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한다는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2.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입찰공고문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및 시설물유지 관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주)○○사와 계약을 체결함.
- ○○에서는 '19. 5. 8. 계약 체결한 "○○ 소음방지 인테리어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총 공사예정금액 7천 8백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 1천 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되므로 전문건설업(실내건축 공사업,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은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유의사항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해당 여부 확인 철저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5조의2(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면허 보유 여부 확인 철저

판단 기준

- ○○○○○○ 「여비 규칙」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등에 따르면 출장자가 근무지 외의 출장인 경우 철도운임 등의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여비를 정산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감사대상 기간동안 ○○○○○○ 소속 직원 15명은 출장을 수행하면서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반환(취소)하고 실제로는 다른 시간대의 열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함으로써 운임 차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을 그대로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요된 운임과 다르게 정산을 신청하였음.
- 이로 인해 총 63건에 걸쳐 1,150,500원의 열차 운임을 부정 수령하였고, 특히 ○○○○는 32건에 걸쳐 801,700원의 열차 운임을 부정 수령하였음

유의 사항

- ☞ 관련 법령에 따라 철도임 등의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여비 정산 철저

판 단 기 준

-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에 따른 예산 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 계약 개요, 계약 상대자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명시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에서는 신규 직원용 컴퓨터, 모니터 등의 전산 장비 및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면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전산장비 3건, 94,900천 원, 사무용 가구 2건, 41,334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고,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인지를 확인한 바 없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20일 이상의 입찰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2건의 용역 사업에 대해 짧은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1건의 사업에 대해 평가 위원의 보안 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함.

유 의 사 항

-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 ○○○○○○○○ 「시설관리 규칙」 제6조(규칙의 위임), 「시설관리 지침」 제46조의2(입주기간 및 연장) 등에 따르면 7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주모집 공고를 거치고, 입주 공고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추가 연장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에서는 임대공간 공실에 대하여 매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28개 업체의 68개소 입주공간이 7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모집 공고 시 '입주기업 연장신청 예정공간'으로 두거나, 공실에서 누락시켜 기존 업체와 입주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

유 의 사 항

- ☞ 「시설관리 규칙」 제6조(규칙의 위임), 「시설관리 지침」 제46조의2(입주기간 및 연장) 등 재단 자체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주모집 공고절차 등 이행 철저

판 단 기 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 지체상금 징수 여부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용역을 지연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에서는 '19. 6. 25. ○○○○○○연구소와 계약체결한 "○○ ○○○ ○○○○ 연구용역" 등을 비롯한 총 5건의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완료일을 10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용역 지연의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총 100일 동안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 일수가 적정한지 검토 없이 ○○○○○○○○의 귀책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체상금 642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불가항력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 철저

판 단 기 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재단 「성과상여금 운영기준」 제2조의2(지급제외) 등에 따르면 ○○○○○재단에서는 기준연봉에 더해지는 성과연봉 산정 시 개인별 평가등급은 직전 연도의 성과평가 등급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등 징계 처분 대상자는 다음 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재단에서는 기준연봉에 더해지는 성과연봉 산정 시 성과연봉가산액의 평가등급을 직전 연도 개인별 성과평가 등급이 아닌 직전 연도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받은 등급인 전전 연도 성과평가 등급으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 ○○재단 성과연봉은 직전 연도의 성과평가 등급이 아닌 2년 전의 성과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21. ○. ○○.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의 경우 '22년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며, 입사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한 직원들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였음.

유 의 사 항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대상 확인 철저

판 단 기 준

- ○○○○○○재단 「규정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구분), 「복지규정」 제2조(적용대상) 및 제10조의3(합숙소 설치 및 운영), 「합숙소운영요령」 제6조(입소자격),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제3조(적용범위) 등에 따르면 ○○○○○○재단에서는 「복지규정」의 개정 후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직원)의 직원 외 단기근로인력(기간제) 등에게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 및 합숙소(월 임차료)를 지원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재단에서는 「복지규정」의 개정절차 없이 “규정”보다 하위규정인 「단기근로인력 운용기준」 제17조(맞춤형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재단 「복지규정」 제11조의4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단기근로인력에게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 ○○○천 원(기본포인트○○○천 원 + 건강검진 ○○○천 원)을 기본포인트로 제공하고 이에 개인별 근속포인트 및 가족포인트까지 가산하여 배정·지급하였음.
- 또한 「단기근로인력 운용기준」 상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음에도 '20. ○.부터 당시 단기근로인력인 기업지원본부 소속 ○○○에게 ○개월간 임차료 ○○만 원을 지원하였음.

유 의 사 항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제3조(적용범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등 근거 마련 후 지급 철저

10 이사회 의사록 기록 부적정

판 단 기 준

- ▣ 「재단법인 ○○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 ○○재단에서는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회의 이사회(서면 ○, 대면 ○○)를 운영하면서 참여 임원의 발언기록 없이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만 요약기록하여 안건의 수정가결 또는 원안 수정 등에 따른 참여임원의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

유 의 사 항

- ☞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철저

11 유연 근무자 복무 관리 부적정

판 단 기 준

- ▣ ○○○○○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제28조에 따라 직원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미출근, 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서를 사전 또는 사후 제출하여야 하며, ○○○○○ 「징계양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2>에 따라 월 3회 이상의 지참자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직원의 근태 관리를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 ▣ ○○○○○에서 유연 근무를 시행한 '20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년에는 36명 101회, 2021년에는 14명 25회의 지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중 5명은 부서장의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지 않고 월 3회에서 월 9회까지 지참하였음에도 소관 부서에서는 유연 근무자들의 근태와 관련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사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연 근무자 복무 관리 등 근태 관리 철저